

주체90(2001)년

6.15주간

6.15Weekly
제22호 (11월 16일~11월22일)

특집1 - 남북관계 먹구름, 누구에게 책임있나

특집2 - 국정원, 파시즘의 부활을 바라는가

노작 - 3.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SCM 결과 ≪국민염원 저버렸다≫

국정원, 프락치 통한 학원사찰 의혹…아주대등 5곳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위반 연행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22호 (11.16~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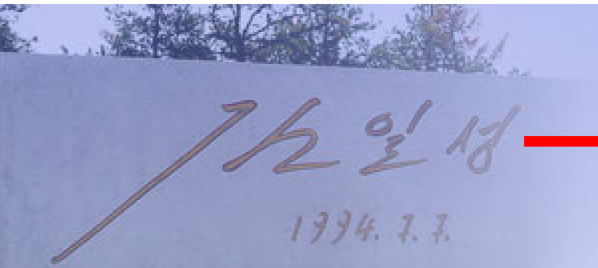


3.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김일성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총비서

주체 59(1970)년 11월



동지들!

남조선혁명은 전조선혁명의 구성부분입니다.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총결기간에 남조선 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 침략 기지로, 군사적 부속물로 더욱 철저히 전변시켰으며 군사 퐛쇼 독재에 의거하여 침략과 전쟁정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적극화되였으며 따라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에는 보다 심각한 위기가 조성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기간 남조선 정세발전에서의 주되는 총화입니다.

남조선혁명은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기본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내쫓고 그 식민지통치를 없애며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 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움으로써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실제적 통치자이며 남조선혁명의 첫째가는 투쟁 대상입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그 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오늘의 불행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비호 밑에 남조선인민들을 억압하며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남조선혁명의 동력은 로동계급과 그의 믿음직한 동맹자인 농민을, 비롯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 일부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입니다. 남조선에서의 혁명투쟁은 미제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한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진보적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적 군인, 애국적 민족자본가들과 소자산계급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의 정의의 투쟁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계속 꾸준히 벌려 왔습니다.

특히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전후 시기에 와서 점차 새로운 발전 7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어려운 시련 속에서 그 성과를 확대하면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전후에 남조선인민들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며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웠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피도 많이 흘렀고 가슴아픈 실패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한 희생과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포악한 적들과는 오직 조직된 힘으로 맞서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고귀한 진리를 점차 깨닫게 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혁명력량을 하나로 굳게 묶어 세우며 투쟁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당을 세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줄기찬 투쟁의 결과로 그리고 남조선혁명운동발전의 필연적 요구를 반영하여 1955년 12월 남조선혁명가들의 합법적 정당으로서 진보당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진보당은 반제, 반파쑈, 평화통일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투쟁강령을 내놓고 각계각층의 애국적 민주주의력량을 묶어세우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정책과 파쑈화정책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였습니다. 남조선의 평범한 인민들 속에서 진보당의 위신은 높아졌으며 특히 이 당이 내놓은 평화통일강령은 남조선사회에서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였습니다.

1956년에 있은 괴뢰대통령 선거 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폭압과 사기와 협잡 속에서도 진보당이 내세운 ≪후보자≫가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인 리승만이 얻은 투표수보다 약간 적은 수인 200만 표 이상의 찬성투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민족분렬정책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절실히 념원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진보당의 영향력이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빨리 확대강화되는 데 겁을 집어먹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류혈적인 탄압책동을 벌려 수많은 진보당당원들을 체포 투옥하고 그 당수 조봉암선생을 학살하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당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1958년 1월에 진보당은 자기 존재를 끝마치게 되였습니다. 비록 진보당이 원쑤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대중적 혁명운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보존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의 기운을 더욱 높이고 인민들의 반미반독재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진보당이 해산된 후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탄압책동은 더욱더 강화되였습니다. 그러나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혁명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혁명력량은 끊임없이 자라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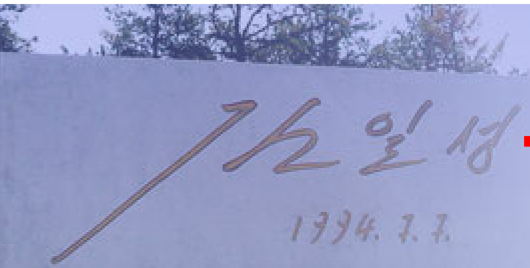
1960년 4월에 있는 인민봉기는 남조선혁명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4월 인민봉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오래동안 쌓이고 쌓였던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남조선 전역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광범한 군중이 참가한 대중적인 반미구국항쟁이였습니다.

남조선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미제의 오랜 앞잡이인 리승만괴뢰정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후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이룩한 첫 승리였습니다. 4월 인민봉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 기개를 뚜렷이 시위하였으며 인민대중이 힘을 합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다면 원쑤들의 어떠한 아성도 능히 짓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4 · 19 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정세는 혁명의 편에 이롭게 전변되였습니다.

4월 인민봉기에 뒤이어 남조선 애국자들과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날로 강화되고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대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대중당이 나오게 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의 지도 밑에 사회대중당은 민족자주로선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통일 국가의 창건을 당면 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대중적 진출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구국운동에로 이끄는 활발한 조직정치활동을 벌렸습니다. 이 당은 광범한 민주주의력량의 통일전선적 련합체인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뭇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 각층 인민들의 공동투쟁을 조직지도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의 지도 밑에 투쟁의 불길은 남조선 온 지역에 세차게 타 번지고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남북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청년학생들의 혁명적 진출을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끝장내며 그 식민지통치기구를 때려 부시고 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발전시키지 못하였으며 이 투쟁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회대중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반동 군사 깡패들을 내세워 반혁명적인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혁명력량에 대한 파쑈



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나섰을 때 그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지 못하였으며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결국 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5·16《군사정변》이 있은 후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에서 로골적인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짓밟고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언론, 출판 기관들을 폐쇄하고 수십만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원쑤들의 이와 같은 야수적 폭압으로 말미암아 사회대중당은 파괴당하고 남조선의 혁명력량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러한 투쟁과정을 통하여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더욱더 각성되였으며 많은 귀중한 교훈과 가치있는 투쟁 경험을 쌓았습니다. 남조선혁명운동의 력사적 경험은 정권을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 이행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순수 대중운동만으로는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 미제의 비호 밑에 남조선의 력대 반동통치배들은,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진보적 인사들이 정권에 들어앉을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그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대중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매번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진보당도 바로 조국통일의 구호 밑에 선거에서 인기를 끌게 되자 곧 파괴당하였으며 사회대중당 역시 광범한 대중을 조국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에로 이끌고 인민들 속에서 신망이 높아지자 강제로 해산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테로를 감행하는 것은 원쑤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놈들은 해방직후에도 려운형 선생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단 한 가지 리유로 암살하였으며 김구선생 역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에 참가한 뒤 진보적으로 나가게 되자 암살하였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남조선의 반동통치배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공손히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진보적 력량을 암살하기 위하여 반혁명적 폭력에 필사적으로 매어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오직 혁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만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들은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리는 것과 함께 적들의 반혁명적 폭력에 혁명적 폭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였습니다.

특히 4·19인민봉기와 그 후의 사태발전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 엎기 위한 결정적인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오직 로동계급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 당의령도 밑에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동원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피의 대가로 얻은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옳게 살리면서 군사파쑈통치배들의 악독한 폭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혁명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남조선혁명운동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하고 혁명을 성과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관건적 고리를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에서 찾았으며 온갖 간난신고를 이겨내면서 통일혁명당건설을 다그치였습니다.

가들과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 속에서 나오게 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맑스-레닌주의당의 출현으로 남조선의 억압받고 착취받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및 민족적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은 자기의 믿음직한 정치적 참모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통일혁명당의 정치적 립장과 투쟁목표는 지난 해 8월 서울에서 이 당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통일혁명당 선언과 강령에서는 당의 지도리념이 맑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의 최고 목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당면목적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와 파쑈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며 나아가서 민족의 희망과 념원인 조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혁명당이 내세우고 있는 투쟁목표와 투쟁강령은 남조선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와 각계각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력량의 공동의 정치강령으로 되며 전체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목표로 됩니다.

통일혁명당조직들은 매국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1964년의 6·3봉기, 《한일협정》을 배격하는 1965년 8월 투쟁, 1967년의 괴뢰대통령 및 괴뢰국회의원 《선거》반대투쟁을 비롯한 많은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당은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남조선인민들 속에서 그 영향력과 신임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 남조선혁명가들은 통일혁명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그 두리에 애국적 인민들을 굳게 묶어 세우며 지하와 산 속에서, 감옥과 교수대에서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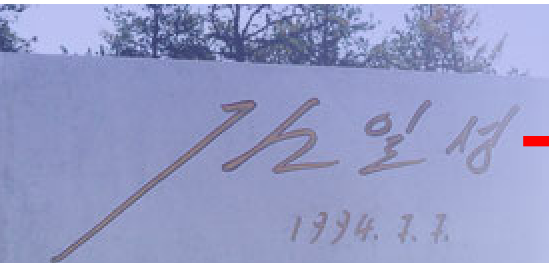
동지들!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때려부시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혁명력량을 계속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원쑤들의 반혁명적 공세를 제때에 물리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혁명적 대사변을 준비있게 맞이 할 수 있습니다.

혁명력량을 마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당을 강화하며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을 굳게 묶어 세워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것입니다. 남조선혁명가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혁명군중이 있는 모든 곳에서 당력량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당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단체들을 조직하며 그것을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기본부대를 잘 꾸리는 것과 함께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층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묶어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혁명력량의 절대적인 우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혁명조직들은 반제반파쑈민주화의 기치 밑에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군중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망라하는 반미구국통일전선을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 세우며 이들과 혁명의 주력군인 로동자, 농민들과의 조직적 뉴대를 긴밀히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 투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만 끊임없이 장성강화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만 인민대중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고 조직적 결속이 촉진되어 혁명의 핵심 대렬이 늘어나고 혁명조직의 전투력이 강해집니다.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장성 발전시키는 과업이 긴급하면 할수록 미제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대중적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전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옳은 전략전술적 지도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하고 혁명발전의 요구와 군중의 의식 수준을 잘 참작하며 그에 알맞는 투쟁구호를 내세우고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선택하며 원쑤들의 내부모순과 약점들을 비롯한 온갖 가능성들을 능숙히 리용하는 것입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



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투쟁형태와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 폭압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과 생존의 권리를 위한 근로대중의 경제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정치적 자유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더욱 목적의식화하면서 그들의 민주주의운동을 로동자, 농민들의 정치투쟁과 밀접히 련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혁명적 폭력은 혁명적 폭력으로 짓부시며 폭력에는 언제나 폭력으로 맞설 수 있도록 혁명력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투쟁을 통하여 정치적 군대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축적하여 나간다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있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경은 현 반동정권을 뒤집어 엎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움으로써 남조선혁명의 목적을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의 승리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앞길은 의연히 험난합니다. 그러나 원쑤들의 어떤 발악도 어떠한 간난신고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어선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으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멈춰세울 수 없습니다.

남반부 인민들은 자기의 혁명투쟁에서 외롭지 않으며 북반부에 위력한 혁명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조선혁명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 자신의 투쟁입니다.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혁명투쟁에 의하여서만 자유와 해방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인민들 자체가 주동이 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북반부 인민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정세는 반혁명에는 불리하고 혁명에는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으며 모든 대륙의 진보적 인민들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해방 투쟁을 견결히 지지 성원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제식민지통치의 붕괴와 인민들의 혁명위업의 승리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동지들!

미제국주의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민족적 재난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전 조선 사회의 통일적 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임무이며 한시도 미를 수 없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량심을 가진 민주인사가 정권에 들어앉아 미군 철거를 주장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이라면 그들과 언제 어디서나 평화적 조국통일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루차 표명하였습니다. 남조선의 현 위정자들이 파쑈적인 군사정변을 꾸며내고 정권을 가로챈 다음에도 우리는 그들이 매국매족행위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민족적 립장으로 돌아설 것을 바라면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참을성있는 로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몰아낸 다음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고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협정을 맺으며 남북 사이에 경제문화교류와 인사왕래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며 조선인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때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세울 것을 남조선 당국에 여러번 제의하였습니다. 만약 이러저러한 리유로 남북조선총선거를 당장 실시할 수 없다면 먼저 민족공동의 관심사로 나서는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과도적 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라도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전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는 우리의 정당한 제안들을 매번 묵살해 버렸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한사코 반대하여 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비호 밑에 남조선 괴뢰들은 조선의 통일은 오직 ≪승공통일≫이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떠벌리면서 있지도 않는 이른바 ≪남침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을 말살하고 나아가서는 공화국북반부를 무력으로 침공하려는 침략적 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쑤들은 이런 황당한 구실을 내걸고 미제침략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려고 꾀하는 한편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군사 시설들을 확장하며 전쟁준비를 미친듯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남조선 위정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승공통일≫이란 공산주의를 없애고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황한 망상이며 얼빠진 자들의 잠꼬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벌써 25년 동안이나 공산주의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자기들의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여 왔습니다. 공산주의사상은 이미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의 심장을 튼튼히 틀어잡았으며 허물 수 없는 위대한 물질적 힘으로 전변되였습니다. 조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쳐놓고 나라를 통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남조선을 영원히 미제의 식민지로 내맡기자는 것입니다.

요즘 남조선 괴뢰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이른바 ≪평화통일구상≫에 대하여 말, 한다면 그것은 조국통일 문제를 실현할 아무런 방도도 없는 철두철미 허위와 기만에 찬 정치적 모략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화통일구상≫이요, 뭐요 하고 떠벌리는 목적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고 있는 자주적 평화통일기운을 무마하고 저들의 매국매족행위를 가리우며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세계의 이목을 딴 데 돌리려는 데 있습니다.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총칼로 탄압하며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계속 애걸복걸하며 일본군국주의침략세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자기 민족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넘기며 월남침략전쟁에 남조선 청년들을 미제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는 매국역적들과 어떻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남조선에 미제침략군대와 현괴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와 평화통일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 군사파쑈독재를 뒤집어 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서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 것입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그 어떤 발악적인 책동으로서도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억센 투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들은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원쑤들의 음흉한 책동을 반드시 짓부시고야 말 것이며 조국을 기어코 통일하고야 말 것입니다.





3. 소비에트냐, 인민혁명정부냐?

≪세기와 더불어≫ 제3권 제7장 인민의 세상

…

왕청 2구 소비에트 창립 행사에 참가한 마촌 사람들 가운데는 소비에트를 쇠버치로 해석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어떤 고장 사람들은 소비에트 선거에 참가하러 가는 유권자들에게 ≪소비에트가 어떻게 생긴 겐지 잘 보고 오게. 큰 겐지 작은 겐지.≫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하며 또 어떤 고장 사람들은 ≪소비에트란 어른이 온다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야단났다.≫고 하면서 광주리를 들고 나물캐러 떠났다고도 한다.

인민들이 이처럼 소비에트에 대하여 제나름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만 사람의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적인 주석을 가하게 된 것은 무식이 빚어낸 응당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군중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선전사업을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해설제강이라는 것은 대체로 제목부터가 대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외래어 투성이로서 ≪소비에트란 무엇인가?≫, ≪꼴호즈란 무엇인가?≫, ≪꼼뮨이란 무엇인가?≫하는 따위의 것들이였는데 소비에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전원들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다.

좌경의 독소에 중독된 급진분자들은 이처럼 인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소비에트를 도처에 세워놓고 노동자와 빈고농의 독재를 부르짖으며 혁명이 다 된 것처럼 허장성세하였다.

나는 왕청동무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동장영을 정권형태 문제에 대한 논쟁에로 끌어들였다.

≪간도 일각에서 혁명정권이 태어나 온 세상에 자기 존재를 선포



세기와 더불어

한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장영동지, 나는 이 소비에트노선 때문에 우리의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동장영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하다니 그건 무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명월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우리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반일애국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울 데 대한 노선을 내세우고 그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몇년동안 국내와 만주지방에서 피어린 투쟁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많은 군중을 묶어세웠습니다. 그 군중들 속에는 애국적인 종교인도 있고 상공인도 있고 하급관리들도 있고 심지어는 지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의 시책은 그들을 일률적으로 배척해버렸습니다. 어제까지 혁명을 지지하거나 동정하던 그들이 오늘은 혁명을 외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조중 인민들 사이의 관계도 다시금 악화되었습니다.≫

동장영은 웃으면서 내 팔목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본질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 정권이 인민들이 바라던 것을 죄다 해결해주었다는데 있습니다. 혁명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을 위시한 절대다수의 군중은 소비에트 정권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겁낼 게 있습니까. 노동자와 농민만 있으면 어떤 혁명이든지 다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소수의 손실은 각오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밀어던지겠습니까. 우리의 총적인 전략은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절대다수의 대중은 모두 쟁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습니다. 5.30폭동을 계기로 저락되었던 공산주의자들의 체면도 가까스로 회복하고 조중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조성된 불화도 천신만고하여 제거해 놓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여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또 조성되었습니다.≫

≪**김일성**동지. 너무 비관적으로 문제를 고찰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나는 원래 만사를 낙관적으로 대하는데 버릇된 사람입니다. 혁명은 물론 앞으로도 승승장구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장영 동지, 동만에 조성된 좌경적 시책의 후과에 대해서는 심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만당은 이 문제에 대해 응당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검토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을 검토하고 그 시책을 낳고 있는 정권형태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동장영은 그 말을 듣자 미간을 모으고 못마땅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일성**동지, 소비에트 정부의 시책에는 물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형태는 불가침입니다.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것은 중앙의 노선입니다.≫

논쟁은 계속되었다.

동장영은 자기의 주장의 고집하면서 소비에트를 절대화하였다. 그는 성미가 온화하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었으나 벽창호였다. 지식이 풍부한 반면에 사고와 실천에서는 교조를 많이 범하였다.

그후 나는 다시 동장영과 함께 정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날의 논쟁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된 것은 소비에트를 유지하는가 포기하는가, 포기한다면 새로운 정권형태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수행해야 할 동만지방의 유격구들에서 소비에트가 실정에 맞지 않는 정권형태라는 것이 생활적으로 증시된 조건에서 조중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결단을 내려 정권형태를 바꾸고 인민이 구미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 혼란상태에 빠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동장영을 설복하였다.

≪소비에트가 동만의 실정에 맞지 않고 또 소비에트의 일부 시책이 혁명에 손실을 주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전번에 **김일성** 동지는 소비에트노선때문에 통일전선노선이 침해를 당한다고 걱정하였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였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동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나로 하여금 **김일성** 동지의 그 경고를 심사숙소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직 소비에트를 대신할 만한 정권형태를 확정짓지 못하였습니다.≫

특위서기의 견해에서 생긴 변화는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날의 동장영은 군중의 기세가 높은 혁명의 고조기에는 소비에트만이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정권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왕년의 그 고집스런 특위서기가 아니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노동계급의 정권형태는 꼼뮨과 소비에트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장영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눈길은 마치 당신이 나를 납득시킬 만한 형태를 찾아낸다면 나도 구태여 반대하지 않겠다는 암시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실정에 맞는 형태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봅시다.≫

≪우리가 만든다구요? 슬프게도 나는 그럴만한 천재가 못됩니다. 맑스주의 고전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를 고정불변의 것으로 절대화하고 거기에 자기를 얽매려는 그런 부류의 견해와 입장에 나는 동감을 표시할 수 없었다.

≪동장영 동지. 프랑스 노동계급이 꼬뮨을 내올 때 그 무슨 고전을 참고했던가요? 러시아의 소비에트가 맑스주의 창시자들의 고전에서 명시된 정권형태였던가요? 소비에트를 어찌 한 천재의 두뇌가 낳은 산물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인민이 요구하지 않고 러시아의 현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소비에트는 역사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동장영은 아무 응대도 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큼직한 담배 쌈지를 꺼내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물고 나에게도 권하였다. 그는 유격구를 돌아다닐 때에도 노상 손에 담배쌈지와 골통대를 들고 다녔는데 노상에서 농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골통대에 담배를 담아 피우라고 권하는 특이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소박한 성품 때문에 유격구 인민들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그는 겨울이면 농민들이 쓰고 다니는 개털모자를 쓰고 다녔다.

나는 동장영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그가 내 말을 반박하지 않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였다.

동장영을 만난 후 나는 이용국, 김명균, 조창덕을 비롯한 몇몇 군정간부들과 함께 소비에트를 대신하는 혁명정권을 세울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심각한 토의를 하였다.

토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정권형태의 규정에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는 그때 그 기준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인민을 위한 투사들이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충복들인 것만큼 우리가 수립하게 될 정권이 각계각층 인민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으며 인민의 지지환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데 기본을 두고 현 단계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동무들은 모든 것이 명백해진다. 각계각층



세기와 더불어

인민이라는 범주 속에는 노동자와 빈고농만이 아닌 광범한 근로대중이 포괄되겠는데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는 통일전선적 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통일전선적 정권이야말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성격에 부합되는 정권으로 될 것이다. 그런 정권이라면 쌍수를 들어 찬성한다고 하면서 환성을 올렸다.

나는 통일전선적 정부를 세우되 노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적 인민혁명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다시금 역점을 찍어 말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역사책들에서 인민혁명정부노선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정권건설 노선이다. 가결 결과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가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만 지방에 적합한 정권형태로 인민혁명정부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혁명의 성격에도 알맞고 인민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정권형태의 기준을 인민의 요구에서 찾고 인민의 이익을 얼마나 옹호고수하며 철저히 대변하는가 하는 데서 찾았다.

이처럼 정권형태를 인민혁명정부로 결정한 다음 우리는 어느 한 단위에서 먼저 시범을 창조해보고 그것이 좋다고 인정되면 다른 혁명조직들에도 일반화하자는 데 합의를 보았다. 시범 단위로는 5구가 결정되었다.

나는 왕청 5구에 내려가서 이용국, 김명균 등과 함께 인민혁명정부 제5구위원회 대표를 선출하는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은 사수평으로부터 10리쯤 떨어진 하모다니촌에서 진행되었다. 그날은 모쁘르기념일이었다. 모쁘르란 국제혁명투사후원회의 약칭이다. 1923년에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서는 희생된 혁명투사 유가족들의 후원을 목적으로 이 조직을 내오기로 하였고 3월 18일을 국제적인 모쁘르기념의 날로 정하였다. 5구소비에트정부 회장인 조창덕은 소비에트정부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나는 그 집에서 20명가량되는 가야허지방 농민들과 담화를 하였다.

≪우리는 소비에트정부 대신 새 정부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사에 맞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부를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한 노인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안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부만 세워주면 원이 없겠수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소비에트정부를 대신하게 될 정부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과 이 정부는 세계정권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로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선언하였다.

≪이 정부는 조국을 사랑하고 겨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그들의 숙망을 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숙망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지는 것, 노동의 권리를 가지는 것,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것... 인민혁명정부는 이 모든 소원을 죄다 풀어줄 것입니다.≫

가야허의 인민들은 인민혁명정부노선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우리는 인민혁명정부의 탄생을 선포하는 의식에 앞서 소비에트정부가 몰수했던 개인의 재산들을 본인들에게 모조리 되돌려주었다. 몰수 후 파손되었거나 소비해버린 물건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양성룡은 목재소를 치는 전투까지 조직하였다. 그 전투에서 노획한 소와 말로 농민들은 그해 봄 분여받은 땅에서 밭갈이를 하였다. 이날의 모임에서는 인민혁명정부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라는 내용의 나의 연설이 있었고 10개조항에 달하는 정부정강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 정강 내용은 훗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사수평 마을에 갔을 때의 인상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현당 서기 이용국의 모습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춤판에 뛰어들어 축제의 기분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한쪽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춤판에서 슬그머니 떨어져나와 그의 곁에 가까이 다가갔다.

≪서기 동무, 모두가 춤을 추는데 이게 웬일이오?≫

이용국은 두 볼에 흘러내린 눈물자국을 씻을 염도 없이 한숨을 무섭게 내쉬었다.

≪저 사람들이 어째서 나에게 침을 뱉지 않는지 모르겠소. 왕청사람들이 좌경 때문에 고통을 받은게 다 나 대문이 아니겠소. 그런데 이 고장사람들은 오늘 나를 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란 말이오. 사실 인사를 받아야 할 분이야 김대장이 아니오.≫

≪우리 인민은 인정이 무른 대범한 인민이오. 그들이 과거를 계산하지 않고 서기 동무에게 감사를 드린 것은 인민혁명정부노선을 달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오. 이제는 우리 다같이 내일에 대해서만 생각합시다.≫

≪나는 지금껏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남의 정신으로 살아왔소. 동무는 나에게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주었소. 인민을 위해 살자! 평범한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소. 나는 평생 이 구호를 잊지 않겠소.≫

이용국은 내 손을 그러잡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다.

그는 이 맹세를 생활에서 만족스레 구현할 수 없었다. 동만특위가 그를 현당 서기의 직책에서 해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특위에서는 이용국이 원래부터 엠엘파라고 하면서 왕청현당이 소비에트노선 집행에서 극도의 좌경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를 해임시켰는데 그에게는 ≪민생단≫ 혐의도 있다고 하였다.

이용국이 엠엘파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당한 소리였다. 세린하에서 청년사업을 하고 있던 그를 동만특위 공청서기로 추천한 사람이 과거 엠엘파에 관계했던 인물이였을 뿐이다. 극좌적인 소비에트노선의 집행으로 인하여 빚어진 모든 후과의 책임을 현당 서기 한 사람에게만 들씌운다는 것도 무리하고 비도덕적인 처사였다. 이용국에게 철직 책벌을 적용한다면 소비에트노선을 내려먹인 사람들과 그 집행을 강요한 당사자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책벌을 주어야 하는가.

이용국이 ≪민생단≫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당치않은 소리였다.

나는 그가 종파도 아니고 민생단도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보증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오의성과의 담판을 위하여 라자구에 가 있을 때 이용국은 끝내 ≪반혁명분자≫라는 감투를 쓰고 처형당하였다. 그가 살아온 경력을 보면 민생단으로 될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한 때 체포의 선풍을 피하여 망명해간 연해주에서 이용국은 망명객으로 일생을 편안히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혁명을 위하여 다시 간도 땅에 돌아와 태풍 속에 몸을 내던졌다. 이처럼 성실하고 양심적인 인간이 어떻게 되어 민생단 모자를 쓰게 되었는지 나는 아직도 그 까닭을 모르겠다.

5구에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된 얼마 후 동장영은 나를 찾아와 웃는 얼굴로 쾌활하게 말했다.

≪**김일성**동지, 오래지 않아 우리는 국제당파견원동지의 참석하에 노선전환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5구에서 인민혁명정부를 건설한 경험도 있으니 정권문제와 관련된 기본발언을 **김일성**동지에게 부탁합니다.≫

...

천출명장과 판문점

김성필 / 구국전선 제460호, 주체90(2001)년 11월 21일



올해 11월 2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신지 5돌이 되는 날이다.

역사에 아로새겨진 주체85(1996)년 11월24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녕을 지켜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전선시찰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날 최전방 판문점을 찾으시었다.

당시 수행원들은 장군님의 신변안전을 우려하여 판문점에 나가시는 것만은 고려해 달라고 간절히 말씀드리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수호하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기어이 끝장내시려는 열렬한 애국애족의 마음과 철의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비무장지대 중앙분리선 가까이에 위치한 판문점에까지 몸소 나오시었던 것이다.

나뭇잎 설레이는 가벼운 소리에도 자동소총의 격발장치를 풀어놓는다는 판문점, 그것도 중앙분리선 수십미터지점까지 그분께서 나오실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김정일**장군님께서 판문점에 나오실 무렵 그 일대에는 지척도 분간할 수 없게 짙은 안개가 끼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비병들조차도 근래에는 보기드문 안개였다고 했다니 그분께서 필경 도술을 쓰시어 이같은 조화를 일으키신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들이 아직도 항간에 분분하다.

더구나 그분께서 ≪판문각≫노대에 오르시어 남쪽을 바라보실 무렵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덮혀 바로 코 앞에서 근무서던 경비병들조차 전혀 감촉할 수 없었다고 한다.

판문점 출입기자들의 후일담에 따르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중대사≫였던지라 상부로부터 추궁을 받은 당일 당직자는 ≪**김정일**장군은 판문점입구까지만 오셨던 것 같다≫고 보고하려다가 판문점 북측지역에 세워진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친필비앞에 서계시는 그분의 영상사진이 이북의 신문들과 TV에 공개되자 황급히 보고서를 재작성하는 희비극까지 연출했다고 한다.

당시 ≪합참본부≫의 한 장성은 그때의 놀라움을 회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때의 ≪판문점충격≫이 아직도 가셔지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날 신비스러운 안개는 장군님께서 ≪판문각≫노대에서 내리시어 주석님의 친필비앞에 이르셨을 때 서서히 걷히면서 하늘에서 햇빛까지 내려비치는 등 신비경이 펼쳐졌다고 한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북의 수행원들조차 자연의 조화가 너무 신비해 ≪과시 **김정일**장군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다≫라고 감탄을 연발했다는 것이다.

국군장병들 속에서 **김정일**장군님은 신묘한 술법으로 온갖 천지조화를 다 부리시는 천출명장이시라면서 이런 영장을 모신 이북군대와 맞선대야 죽음밖에 안겨질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돌아 국방부가 골머리를 앓았다는 얘기도 이때에 있었다.

위대한 천출명장의 슬하에는 무적의 강병만이 있는 법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무적의 강군으로, 평화의 수호자로 준비된 일당백의 인민군장병들이 오늘도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

판문점을 찾으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날 최전방의 영웅들을 만나니 반갑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훈련모습도 보아주시고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일당백의 용사로 준비된데 관해 높이 치하해 주시었다 한다.

미국을 수괴로 한 현대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한 승전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휴전담판회의장과 휴전협정조인장도 친히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키고 조국을 반드시 통일하실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었다고 한다.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숭고한 애국애족의 장정이었고 평화수호의 거룩한 자국이었다. 그분의 판문점시찰에 평화의 교란자, 반통일분자들은 기절초풍하고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터뜨렸다. 무비의 담력과 철의 의지, 임기응변의 지략을 지니신 백두영장의 산악같은 배짱과 배포유한 기상에 평화의 파괴자들은 기겁하여 당장 발밑에서 원자탄이 터지는 것만 같다고 비명을 질렀다.

위대한 천출명장에 대한 전설같은 일화와 위대한 사적이 깃들어 있는 판문점은 평화의 보루로, 민족자주위업수호의 관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제6차 북남장관급회담에 관한 공보

조선중앙통신, 주체90(2001)년 11월 15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제6차 북남장관급회담이 지난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였다.

그러나 회담은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고 끝났다.

지금까지 매 회담들에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북남관계의 현안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한 좋은 합의문을 내놓군 하던 장관급회담이 이번에 성과없이 끝난 것과 관련하여 온 겨레는 의아해하며 그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있다.

그런데 회담이 끝나기 바쁘게 남측 일부에서는 사실과 다른 여론이 돌고 있으며 남측 수석대표 자신이 진실을 가리워 보려고 저열한 수법으로 자기를 변명하며 대화상대방을 비방중상해 나서고 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이번 회담의 전 과정은 북과 남의 누가 실지로 6.15공동선언을 존중하며 서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하여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누가 그에 빗장을 지르는가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1

우리측은 조선반도정세가 긴장하고 북남관계가 곡절을 겪고 있는 때에 열린 이번 회담에서 그 타개책을 강구하며 회담의 결실을 위하여 현실적인 방도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 하였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제6차 장관급회담이 금강산에서 열린 것 자체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이라는 것은 내외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측은 이번에 긴장을 격화시키고 합의사항이행을 중단시킨 장애물을 스스로가 제거하도록 남측에 원칙적인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남측이 우리를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전투비행기들까지 끌어 들여 전쟁무력을 증강하며 군사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각종 전쟁연습을 벌려놓은데 대해 시인, 사죄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그랑수를 쓸 때에도 성근하게 나오도록 거듭 충고를 주었다.

우리는 공동보도문초안도 주동적으로 내놓고 합의를 추구하였다.

우리측이 내놓은 공동보도문초안에는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력, 교류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는데 장애를 조성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11월중에 교환할데 대한 문제,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을 11월 20일에,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를 12월 초에 금강산에서 개최할데 대한 문제, 태권도시범단교환문제, 제7차 북남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데 대한 문제 등이 담겨져 있었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풀어 나가는데서 현실적인 사항들로서 여기에는 남측의 의향도 충분히 반영되여 있다.

특히 우리측은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인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공동보도문에 대한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 남측에 시간을 이틀씩이나 연장해 주며 3차례의 전체회담과 2차례의 단장접촉을 가지였으며 며칠동안 철야로 실무접촉들을 하면서 신축성있는 해결방도들을 거듭 내놓았다.

우리측의 모든 제안들은 조성된 정세로 보나 북남관계의 현실로 보나 가장 정당한 제안들로서 겨레의 염원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2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시종일관 조성된 현 긴장상태를 수습하고 쌍방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려는 입장에 서지 않았으며 회담에서 매우 무성의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번 회담이 민족앞에 아무런 결실도 내놓지 못하게 된 근본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제6차 장관급회담의 장소문제를 가지고 부당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일주일이상이나 회담을 지연시킨 남측은 회담전야에 우리를 걸고 ≪비상경계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각종 전쟁연습소동으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다.

그러나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이 모든 적대행위에 대해 솔직히 시인,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는데로 나올 대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회담에 나와 변명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였다.

남측 수석대표는 회담에서 ≪비상경계조치≫는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조치라느니, ≪남북내왕자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느니 하면서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비상경계조치≫가 저들의 내부문제이라는 주장까지 펴면서 우리를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섰다.

지어 통일문제를 전담한다는 수석대표가 회담을 앞두고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감히 동족을 ≪주적≫으로 본다고 한 것까지 비호하면서 ≪주적≫이라는 개념때문에 북남사이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느니, 정전상태가 계속되고 신뢰구축이 없는 현 조건에서 ≪주적개념≫은 불가피하다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 단합해 나갈데 대한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는 반민족적 행위일뿐아니라 북남관계, 통일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한 무지의 집중적 표현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엄중한 것은 6.15공동선언의 기본명제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를 ≪국제사회와의 단절≫이니, ≪고립≫이니 하면서 심히 모독, 왜곡해 나섰는가 하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외세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대매국적인 망발까지 서슴없이 늘어놓은 사실이다.

얼마나 민족적 존엄도 없고 사대근성이 골수에 차 있으면 동족을 해치려는 남조선강점미군의 무력증강에 대해서까지 ≪전력공백을 메꾸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하였겠는가.

남측의 부당한 태도는 제4차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문제토의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남측 수석대표는 마치도 우리가 저들에게 사전 통고없이 일방적으로 방문단교환을 연기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처럼 말했지만 우리측에서 한가지 묻자고 하면서 남측이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교환을 실지로 가로막은 ≪비상경계조치≫라는 것을 취하면서 그것을 우리측에 사전에 통지나 했는가 대답해

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입조차 열지 못하였다.

더우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고령이고 그들의 상봉을 지체시킬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11월중에 남측에서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하고 방문단을 교환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대해 남측은 시종일관 거부해 나섰다.

우리측에서 남측의 부당한 입장과 태도에 대하여 엄중시하고 강하게 문제를 세우자 그들은 하는수 없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안전성이 담보되여 있는 금강산에서 할 것을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남측이 금강산에서라도 방문단의 교환을 조직할 것을 제의해 나온데 대하여 양해와 이해를 표시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북과 남이 12월 10일을 전후하여 1주일 간격으로 2박 3일간씩 조직할데 대한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쌍방 실무자들사이에는 금강산지역에서 방문단을 교환할데 대한 날자까지 합의하게 되였다.

그런데 남측 수석대표라는 사람이 돌연히 자기의 목 건사부터 먼저 생각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금강산상봉문제를 반대해 나섰다.



그는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문제를 쓸데없이 제7차 장관급회담시일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장소문제와 연결시키면서 방문단교환을 못하더라도 국회청문회에 나가 얻어맞는 일을 할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남측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수 없게 만들었다.

남측의 부당한 입장은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와 제7차 북남장관급회담 시기와 장소문제토의에서도 우심하게 표현되였다.

남측은 긴장상태가 조성되여 있는 저들지역에서 대화도 내왕도 할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서도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금강산이 아니라 서울에서 하자는 모순된 주장을 들고 나와 회담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 이것 역시 양보하여 제7차 장관급회담도 장소를 서울로 하되 시일은 쌍방이 편리한 시기로 정할데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의 정당한 론리와 아량있는 양보로 실무접촉에서 북남공동선언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금강산에서 12월 10일을 전후하여 조직하는 문제,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11월과 12월에 금강산에서 각각하며 제7차 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쌍방이 편리한 시기에 할데 대한 내용으로 공동보도문초안을 완성하였다.

남은 것은 제6차 북남장관급회담 전체회의에서 공동으로 확인하고 발표하면 되게 되여 있었다.

그런데 이 전체회의를 몇시간 앞두고 북남장관급회담 남측수석대표 홍순영이 갑자기 자기가 남쪽에 돌아가면 그 누구의 ≪문초를 받을수 있다≫느니, 그 누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느니, ≪외교관만 하다나니 남북관계가 이처럼 어려운 줄 몰랐다≫느니, ≪공동보도문을 합의하지 못하고 돌아가도 좋다≫느니 하면서 이미 합의된 사항들까지 모두 뒤집는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북남공동선언의 이행과 북남당국대화의 운명을 가늠하게 하는 제6차 장관급회담은 불필요한 논쟁마당으로 되고 결국은 결실없이 끝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3

남측이 이번 제6차 장관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의 최종합의를 고의적으로 돌연히 뒤집고 회담을 결렬시킨 본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민족보다 외세를 우위에 놓고 그에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남측의 사대주의적 근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근본핵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며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취한 남측의 입장과 자세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바로 이 근본핵을 줴버리고 선언의 기본정신에서 멀리 탈선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 것은 고령인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서로 만날 것을 일일천추로 갈망하고 있는 때에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하여 12월에 금강산에서 만나게 하는 것마저 남측 수석대표라는 사람이 뒤집어엎는 놀음을 하였으니 그에게 그 무슨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심정이 털끝만치라도 있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이번에 회담자체에서는 그 어떤 결실도 가져오지 못하였지만 회담과정이 남측의 본심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수 있는 기회로 되였다고 간주한다.

남측은 민족앞에서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자신들에 대하여 돌이켜 보고 얼굴을 붉혀야 한다.

우리는 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6차례에 걸쳐 장관급회담을 진행하였지만 이번에 제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서도 남측에 의해 아무런 결실도 가져오지 못한 회담의 전례를 남긴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남측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릇된 입장과 자세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

남측은 그 어떤 변명과 구실로써도 이번 제6차 장관급회담이 결과없이 막을 내리고 그로 인하여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게 될 것이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결실없는 회담으로 만든 책임, 통일부장관에게 있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6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실없이 끝났는데요. 회담결과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갖고 얘기 나눴으면 해서 자리 같이했는데요. 회담상황부터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먼저 이번 회담에서 이북측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하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려는 입장으로부터 합리적인 제안들과 함께 공동보도문초안까지 제시하고 그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북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연기된 이산가족들의 교환사업을 이남에서 조성된 사태를 시급히 가시고 11월중에 진행하는 문제, 동포애적 견지에서 현시기 그 해결을 절실히 요구하는 금강산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당국사이의 회담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는 문제, 철도, 도로 등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경제분야를 비롯한 각이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금강산에서 12월초에 여는 문제, 그밖에 남북태권도시범단의 교환사업을 남측이 취한 비상경계조치해제와 함께 빠른 시일안에 성사시키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자 : 이북측의 제안을 보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관계를 성의있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수긍이 간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이북측의 제안들은 하나같이 남북관계의 현 실태와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것이 실현되면 의심할바 없이 최근 경색된 현 남북관계를 개선을 하고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려 겨레에게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북측은 정말 남북관계개선에서 꼭 해결할 문제들을 제안했기 때문에 남측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경향각지의 민중이 이북측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하고 세계의 신문, 방송, 통신들이 널리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북측이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내놓은 제안들은 그 어느 것이나 합리성



과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그런데도 남측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불성실한 입장과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네, 한마디로 남측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부당한 태도를 취했어요. 회담의 시작부터 ≪결실없이 돌아갈 것도 생각하고 왔다≫느니 뭐니하면서 합의문초안도 마지못해 뒤늦게 내놓은 등 심히 불성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걸고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무력을 증강한 사실과 ≪주적론≫을 제창하면서 남북관계를 오늘과 같은 엄중한 상태에 빠뜨린 그들의 행위를 사죄할 대신 오히려 그것이 저들 ≪내부문제≫라느니, ≪국제관계문제≫라느니 뭐니하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고 회담앞에 계속 인위적인 난관만을 조성했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 이번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 홍순영이 취한 태도를 보고 사람들 속에서 저런 사람이 통일부장관을 하니 어떻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수 있겠는가 하는 뒤소리가 나올만도 하죠.

윤정원 : 말할 것도 없죠. 홍순영은 회담에서 곧 발표하게 될 공동보도문과 관련해 쌍방 실무자들이 애써 합의해놓은 내용들만이 제멋대로 뒤집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해 나섰고 아무런 타당한 이유와 근거도 없이 독선적으로 쌍방이 실무급에서 합의하고 문안들까지 다 정리해놓은 공동보도문을 전면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밤중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무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의 이런 불순한 행위는 통일부장관이라는 직위로 보나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라는 위치로 보나 심히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도덕이 없는 태도라고 봐요. 그의 이런 무지막지한 태도로 해서 이번 장관급회담은 남북대화의 역사에 있어보지 못한 6박 7일간의 긴 회담으로 기록됐으나 온 민족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교환사업을 비롯해서 일련사안들을 합의못하고 결실없이 끝내게 됐습니다.

사회자 : 그래서 이번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취한 통일부장관 홍순영의 작태를 놓고 각계 민중이 규탄의 목소리를 터치고 있는게 아닙니까.

윤정원 : 그럼요. 서울에 사는 주민 송모씨는 ≪나는 원래부터 홍순영이 통일부장관으로 된 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의 사람됨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번에 그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저런 사람이 통일부장관을 계속 하면 남북대화는 물론 남북관계도 진전시켜 나갈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고 인천시에 사는 이산가족 박모씨는 ≪나는 이번에 장관급회담이 잘 되어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이 이것을 뒤집어엎었으니 *없다. 그 사람을 어떻게 통일부장관자리에 그대로 둘수 있는가. 홍순영은 장관급회담을 결실없는 회담으로 만든데 대해 국민앞에 사죄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학생 송모군은 ≪남북대화를 잘해 나가자면 우선 회담분위기를 좋게 조성해야 한다.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회담기간에 북을 공격하기 위한 한미연합 대규모연안상륙훈련같은 것을 벌인 자체가 회담을 파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지난 시기의 남북대화가 성과리에 진행되지 못한 사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속에 칼을 품고 회담에 임하는 자체가 회담을 파탄시키려는 것이다. 당국은 비상경계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북을 공격하기 위한 일체 전쟁연습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각계민중의 반영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번 회담에서 있은 과정은 한반도에서 누가 진실로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며 누가 그것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발전에 훼방을 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회각계에서 이번 회담을 결실없는 회담으로 만든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이상 통일부장관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남북대화에 임하는 자세를 바로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결실없는 회담으로 만든 책임이 통일부장관에게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통일부장관은 결실없는 회담으로 만든데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머리를 하루속히 식혀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미국의 6.15공동선언이행방해책동을 짓부수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2일~13일



청년학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땅에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경계조치의 강화와 전력증강은 테러위험을 구실로 한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악화시켜 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는 **적인 행위라 하겠는데요. 우리 청년학생들은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좌시할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와 6.15공동선언이행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행위에 온 겨레가 분격해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미국의 6.15공동선언이행방해책동을 짓부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15공동선언이행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애국투쟁은 미국의 악랄하고도 고의적인 방해책동으로해서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군사공격에 따라 인도양으로 이동한 서태평양지역 항공모함전단과 미국 항공전력의 공백을 메운다는 구실밑에 한반도에 공군전력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공격작전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전력공백과 돌발사태대응을 운운하면서 이땅에서 미군무력을 강화하고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게 하면서 한반도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이땅에서 기어이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노골적으로 떠들면서 전력증강에 계속 매달려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의 군사적 위협을 계속 떠들고 있죠. 부시행정부가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을 빌미삼아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면서 한반도주변에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거라든가 또 1994년의 제네바합의와 2000년의 조미공동선언을 변경시키려는 미국의 불순한 태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반도를 대아시아태평양군사전략의 주되는 목표로 삼고 북을 겨냥한 대규모무력증강과 군사훈련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잇따라 강행되고 있는 연합전시증원연습이라든가 연합지대전훈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그 일환인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대국강경, 전력증강책동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전쟁의 위험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이행이 제대로 될수 없다는 건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청년학생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냈고 6.15남북공동선언이라는 민족통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환희와 기쁨, 통일의 열망이 미국의 이같은 악랄하고도 비열한 대북강경, 전력증강과 전쟁책동으로해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던 한반도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덮쳐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전쟁책동을 짓부수지 않는다면 6.15공동선언은 이행될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남과 북의 관계는 냉전상태로 되돌아가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겨레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정의에 민감하고 애국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이런 현실을 어떻게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반미투쟁에 적극 떨쳐 일어나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분쇄해 버려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이 선봉이 서야 이땅의 온 민중이 떨쳐 일어나게 됩니다. 이땅이 반미의 열풍지대로 들끓을 때에만 미국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킬수 있고 6.15공동선언도 성과적으로 이행할수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은 투철한 반미적 입장을 가지고 미국의 침략책동과 6.15공동선언이행방해책동을 규탄배격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이 반미투쟁의 선봉에서 응분의 역할을 다해나갈때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전쟁책동은 저지파탄될 것이고 6.15공동선언은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 나서야하는데요. 이땅에 조성된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의 투철한 반미의지, 굴할줄 모르는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군당국이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8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미연합 대규모연안상륙훈련이 며칠전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서부전선일대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미3해병대 원정군사령관, 주한외국군무관단이 이번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전쟁연습은 한반도작전지역의 특성체험을 통한 연합연안상륙작전수행능력향상과 장갑차와 상륙용고무보트를 이용한 상륙작전절차숙달, 연안장애물극복능력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연습은 서부전선에서 최초로 실시된 한미연합연안상륙전쟁연습으로 해병대 ≪청룡≫부대와 미해병대, 해군6항공전단, 육군도하부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공군이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했고 또 6.25전쟁당시 공군의 최초 출격발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비상출격시험, 고공낙하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연이어 벌이는 이같은 군사훈련들은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며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간악한 기도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평화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유린되고 긴장이 감도는 속에서는 통일을 위한 대화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도 이룩할수 없습니다. 남북이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뤄갈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기본취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오직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주인인 남북의 우리 민족끼리 서로의 뜻과 마음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그러자면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온갖 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합니다.

남북이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주체의 단합된 힘으로 해결하기로 한 여건에서 이에 저촉되는 온갖 전쟁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제와 군당국은 우리 민족과 시대의 이 요구를 외면하고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군당국은 있지도 않는 북의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매일같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대화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며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려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미국과 군당국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좋게 흐르는 한반도의 정세를 대결상태로 되돌려세우지 못해 발광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 선택한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을 차단하자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끝난 것은 회담시간에 미국과 군당국이 대화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벌인데도 크게 기인되고 있습니다. 총포성이 울리는 가운데서는 6.15공동선언이 이행될수 없고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가 진척될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군당국은 6.15공동정신에 위배되는 온갖 전쟁연습을 하지 말고 무력도 증강하지 말며 긴장격화의 기본온상인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심대한 장애를 조성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과를 강력히 규탄

미국 워싱턴에서 제 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김동신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참여한 가운데 14,15일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성격이 미국의 일방적 군사조치를 양국간 사이에 회담이라는 미명으로 합법화시켜나가는 절차라는 점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의 시대가 열린 조건에서 더 이상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연례 안보협의회가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항 강력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회의는 미국이 요구하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긴장상황에 이끌려, 남한 당국이 다시 전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기류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비상경계조치로 말미암아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그 어떤 합의조차 내지도 못하고 결렬된 상황에서 또다시 주한미군 영구주둔과, 한미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한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6.15공동선언의 실현에 결정적 암운을 드리우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이 회의의 두번째 문제점은 주한미군 영구주둔을 위한 환경개선과 미 세계패권전쟁의 일환인 아프간 전쟁에 지원하기 위한 방도를 합의함으로써 미군에 대한 종속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간에 문제점을 한층 악화시킨다는데 있다.

합의내용 면면을 살펴보면 첫째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주한미군 한반도 영구주둔을 위한 주한미군기지 효율적 재배치, 즉 중소형기지를 대형기지로 통폐합하고, 쓸모없는 땅은 반환, 미군 필요의 땅 제공으로 기존 대형기지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 환경개선과 한미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둘째 당국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운영자금 압박과 주한미군 전력의 경제적 가치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비 10% 인상을 동의해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2-3%이고,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6%이다. 또한 농민들은 쌀값하락으로 인하여 연쇄파산을 겪고 있고, 이북 쌀지원 논의는 게걸음 걷고 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기지 사용료를 받지 못할망정,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비를 내는것도 모자라 10%나 인상한다는 것은 당국이 민족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있는지, 미국의 이익이 우선에 두고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셋째 당국이 상호방위조약정신에 따라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아프간전쟁에 비전투병 파병을 합의하였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은 또다른 침략전쟁이며, 미국의 세계 패권전쟁의 일환일 뿐이다. 그 더러운 전쟁에 왜 우리나라가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하는가. 만일 미국이 동족인 이북에게 전세계를 위협하는 테러국가라며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나라는 동족인 이북에게 총을 겨누어야 한다는 말인가. 넷째 내년도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의 안전한 개최를 명목으로 한 미군사력의 증강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벌여온 군사개입을 통한 전쟁, 그리고 아프간전쟁으로 제 3세계의 분노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3세계에 의한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안보협력을 위해 미군사력을 이남 땅에 증강배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여전히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사력의 대상을 이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이고, 남북간의 화해와협력, 평화를 파괴하는, 통일문제의 자주적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군사적 행위인 것이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회의 성격자체가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역행하고 미국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하는 회의이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제 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기조 속에서 주한미군 한반도 영구주둔과, 당국의 굴욕적인 대미군사의존정책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을 노골화 한것으로써,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커다란 장애를 일으키게 할 합의이기에 반드시 전면백지화 되어야 한다.

2001년 11월 19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두고

한양대학교 김영철군, 주체90(2001)년 11월 14일~16일



주체없이 남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라나 민족없이 자주성이 없으면 언제나 예속의 올가미에서 벗어날수 없고 외세의 비위를 맞춰 살아가는 비굴한 작태를 연출하지 않을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한양대학교에 다니는 김영철군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얼마전에 서울 이태원동에 살고 있는 고모네집으로 갔던 일이 있었다. 찾아갈때마다 반갑게 맞이하던 고모였다. 그런데 이날따라 기분이 몹시 언짢아보였다. 그래서 몸이 편찮아 그런가고 물었더니 그런게 아니라고 하면서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표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이번에 제4차 이산가족친척방문단 일원으로 평양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국이 취한 비상경계조치때문에 이산가족친척방문단교환이 무산되고 그 통에 가지 못하게 되어 분통이 터져 그런다는 것이였다.

나는 이날 저녁 고모네집을 떠나오면서 당국이 취한 비상경계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았다. 그 과정에 당국의 처사야말로 천만번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이산가족친척방문단교환이 눈앞에 박두한 때에 당국이 외부에서 벌어진 사태에 빙자해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취하면서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결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에 제4차 이산가족친척방문단교환이 무산된 것이다. 남북사이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는 결국 동족인 북을 주적으로 몰아 대하는데 그 근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가 아프가니스탄의 무고한 주민을 대량살상하고 있는 미국의 야만적인 폭격에 커다란 분노와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항의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때에 유독 이남당국만이 비상경계조치를 취하면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켜 모처럼 합의된 4차 이산가족친척방문단교환을 무산시켰으니 그 죄는 참으로 크고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본다.

이번의 사태를 놓고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 과연 이산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고 기타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해줄 용의가 있는가고.

미국으로부터 숱한 공군무력을 끌어들여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분위기를 조성해놓은 상태에서 이산가족친척방문단교환은 고사하고 인도주의적 문제해결이란 있을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관계당국은 인도주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말과 행동은 언제나 일치해야 한다. 당국이 진정으로 이산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고 기타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자기의 진실성을 국민앞에 보여줘야 한다. 그러자면 마땅히 제4차 이산가족친척방문단교환이 실현될수 있도록 이땅에 조성된 살벌한 분위기를 일신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할 것이다.

나역시 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 투쟁할 굳은 각오를 다지며 집으로 돌아왔다.

외세의존은 영구분열의 길
-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두고

조성림 / 구국전선 제460호, 주체90(2001)년 11월 21일

현시기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족자주선언이며 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다.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 나라와 민족의 통일은 마땅히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현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이룩해 나가자면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해야 하며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동족과 공조하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자주는 통일의 길이고 외세의존은 민족분열의 길이다.

아무런 결실없이 끝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그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번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된 것은 당국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실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남북대결책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당국자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편승해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켜 왔으며 외부로부터 무력을 끌어들이고 이북을 반대하는 각종 전쟁연습을 벌여왔다.

그리고 ≪주적≫론까지 제창하면서 외세와의 야합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 왔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지상포들이 북을 향하고 있으며 대공포들로 하늘을 겨누어 언제 전쟁의 포성이 울릴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이 회담장에서까지 6.15공동선언의 기본명제인 ≪우리 민족끼리≫라는 의미를 ≪국제사회와의 단절≫이니, ≪고립≫이니 하면서 심히 모독, 왜곡해 나섰는가 하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외세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대매국적인 망발까지 서슴없이 늘어 놓았다.

얼마나 외세의존과 사대근성이 골수에 차있으면 이런 망발을 회담장안에서 공공연히 할 수 있었겠는가.

남의 일을 코에 걸고 정세를 긴장시키며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이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데 대한 6.15공동선언에 외세의존으로 대답해 나서는 것은 사대매국노들만이 할 수 있는 반민족, 반통일적 범죄행위이다.

그가 누구든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어 그와 야합하는 길로 나간다면 민족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외세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은 민족의 단합과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앞당겨 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외세에 의존하면 망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6일~18일

통일열망으로 들끓던 이 해도 어느덧 입동이 지나고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일운동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분단의 또 한해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수 없죠. 지금 우리 민중은 소강상태에 놓여 있는 오늘의 남북관계를 보며 동족간의 공조가 아니라 외제와의 공조를 떠들며 남북관계, 통일운동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사대매국역적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격을 누를길 없어 하고 있습니다.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인데요.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지 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부 세력들은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외세에 의존하려는 사대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해서 우리 민중의 통일운동의 앞길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외세에 의존하면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어요. 남과 북이 합의하고 내외가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공공연히 가로막고 있는 사실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특히 미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래 민족자주의 궤도따라 전례없이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반북모략소동과 전쟁도발책동으로 이땅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반민족, 반통일책동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받고 있죠. 이땅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온 겨레는 미제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내부에는 겨레의 이러한 애국애족의 투쟁을 방해하는 반민족반통일세력도 있고 심지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문제에 대한 미제의 간섭과 압력에 갈채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땅의 군사당국자들과 일부 보수세력들은 그 무슨 안보를 운운하면서 미제의 반북모략책동에 합세하여 그와 함께 북을 겨냥하는 대규모적인 군사훈련을 연이어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이익을 희생시켜 외세에 잘 보이려는 매국적이며 6.15공동선언에 도전하는 민족반역행위죠.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건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것만치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에 굴복하는 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길입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굴복하면 민족의 권리와 존엄을 유린당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망국노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죠. 조국통일문제에서도 이 진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해서 민족공동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런만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실현해야 하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죠. 외세는 우리의 조국통일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문제에 간섭해나서는 외세를 배격할대신 그에 굴종해 나서는 건 한조각의 민족적 양심도, 통일의지도 없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일문제에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거나 예찬해 나선다면 침략적인 외세는 통일문제를 저들의 이익에 맞게 마음대로 칼질할 것은 뻔한 일이죠. 우리의 민족의 권리와 이익, 존엄이 여지없이 침해당하고 나라의 통일은 언제가도 실현되지 못하게 될겁니다. 이것은 미제에 의해서 강요된 반세기가 넘는 민족분열의 역사를 통해 우리 겨레가 절실히 느끼게 된 피의 교훈이라 하겠어요.

온 겨레는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사실을 가슴깊이 새겨야하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해 나가야 할겁니다. 그것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우리 민족의 힘에 의거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외세는 절대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결정적 힘은 다름 아닌 조국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민족의 힘이 제일입니다. 민족의 힘을 믿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또 못해낼 일도 없어요. 민족의 힘에 의거하면 승리하고 외세에 의존하면 망합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존이 아니라 민족의 힘에 의거해 풀어나가야 하죠.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온 겨레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무엇에 기대할 것도 없고 그 누구에 맡겨둘 것도 없는 것이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그에 굴종해서도 안됩니다. 외세와 결탁해서는 더욱 안돼죠. 그것은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문제해결을 가로막고 민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테니까요. 그런만큼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외세의 침략과 간섭 그리고 외세의존책동을 짓부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려는 굳센 의지를 간직하고 성스러운 조국통일운동에 다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족은 외세의 이기적 목적에 의해 분열되게 됐고 지금까지 반세기이상을 그 외세의 방해책동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참된 통일을 바란다면 통일을 민족의 사활적 문제로 삼고 있는 피를 나눈 동족끼리 공조하고 힘을 합쳐야 하는 거겠죠.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와의 공조를 떠드는 자들은 통일을 하지 않으려는 반통일역적들입니다. 외세와의 공조를 떠드는 반통일역적들을 그냥 두고서는 어느때 가서도 통일을 이룰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민족의 명부에서 하루빨리 제거해버려야 하겠죠.

≪북측의 금강산 안 수용했어야≫

평화통일시민연대, 첫 평화통일시민토론회 개최

≪금강산은 남북화해의 상징성을 가진 장소로 더 이상 북쪽 땅만은 아니다. 따라서 북측의 금강산 안을 수용했어야 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평화통일시민연대)가 15일 오후 4시 흥사단 강당에서 ≪미국테러사태 이후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회 평화통일시민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번 6차 장관급회담의 결렬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고유환 교수는 ≪미국 테러사태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이라는 발제를 통해 5차 장관급회담을 재개했던 북한이 ≪반테러대비태세≫를 문제삼아 이산가족상봉과 태권도시범단 교류를 유보한 배경으로 ▲주한미공군의 전력증강과 남한의 비상경계태세의 강화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따른 체제이완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 ▲남북관계 활성화 노력에 대한 관광대가의 미지불과 식량, 전력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데에 따른 군부의 불만 반영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북한의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을 들었다.

고유환 교수는 이번 6차 장관급회담은 북측 지도자의 의지와 남측 여론과의 한판대결로 장소 문제는 명분의 문제였다면서 북측이 제시한 금강산은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왔고 남북공동행사가 열렸던 곳으로 정부가 이를 수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여론을 의식해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지난 10월 12일 발표된 북의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으로 결국 또다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고 주적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결국 북측이 문제로 보는 대목이고 특히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적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했다.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전망≫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테러가 미국의 안보정책면에서 ▲테러에 대한 대응을 상대적으로 중시 ▲대테러 국제연대를 통한 국제질서의 주도권 장악노력을 지속적 전개 ▲장기간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당분간 ≪다자주의적 접근≫ 강조 ▲아프간 전쟁 수행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의 교두보 마련 ▲동맹국 정책에서 일부 차별적 변화(대테러전쟁 참전 및 전쟁부담의 분담 명시적, 암묵적 요구)등의 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특전사 병력의 파견 등을 요청하면서 대테러 국제연대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서주석 연구위원은 테러사태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지만 간접적 영향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을 대테러 국제연대에 편입시킬 것을 목표로 기존의 북미간 협상 의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요건으로 미국이 제시한 4가지 요건중 마지막 남은 일본 적군파 추방 등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경우 오히려 북.미관계는 개선될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제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먼저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결렬된 6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은 명분으로 삼고 있는 비상경계태세는 단기적 명분에 불과하고 결국 국방백서의 주적문제가 장기적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석 연구위원은 실질적으로는 금강산 관광대가로 미지급한 2천 4백만 달러 등은 남북한 신뢰구축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있어 이의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시민운동세력의 금강산 관광사업 살리기 운동 전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철기(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의해 아프간 전쟁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새로운 ≪희생양≫으로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의 MD(미사일방어) 계획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북한 위협론을 강조하고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북미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철기 교수는 남북관계의 경색 원인으로 미국 변수와 우리정부의 비자주성을 들면서 특히 FX(차세대) 전투기 구입 등의 무기구입에 있어서의 비자주성을 강조했다.

김동수(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이 북미관계가 현상유지수준에 머무를 경우 남북관계 진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고유환 교수의 입장에 대해 오히려 북한은 북미관계 진전에 주력할 것이라는 시각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근식(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은 6차 장관급회담 결렬의 본질적인 이유로 신뢰문제를 들면서 고유환 교수와 이종석 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따라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조건없이 식량 30만톤을 지원하고 전력지원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6차 장관급회담의 결렬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장기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상돈(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6차 장관급회담에 대한 고유환 교수의 평가에 반해 우리 정부의 원칙고수가 옳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은 북한이 미국의 반테러 응징전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고유환 교수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는 북한이 테러사건 이후 미국과 남한을 압박하여 테러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나가는데 북한이 주도성을 발휘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남북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결국 미국에 있다는 데 동의했으나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현 시점에선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남북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 외에도 청중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6차 장관급회담의 결렬에 따른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과 홍순명(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장과 김남식(평화통일시민연대) 고문의 격려사가 있었다.

특히 김남식 고문은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은 있지만 올바른 길로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어려운 현상황에서 민중과 민간단체가 자주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추진력을 갖도록 당국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6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관련 성명

테러방지법은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으로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국정원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서 혹시라도 있을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입법 예고기간을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정을 하는 것으로 제출하였다.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은 우선 국가보안법처럼 모호한 법적용이 가능하여 민주주의에 심대한 훼손을 가할수 있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 할수 있다. 이 법에서는 ≪정치적 · 종교적 · 이념적 · 민족적 ·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안당국의 모호한 법적용에 의해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시위형태도 테러행위로 규정될수 있으며, 시위단체도 테러단체로 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둘째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던 민간인 사찰등을 합법화 한것이라 할수 있다.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 · 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은 모호한 법적용으로 인하여 이미 국가보안법 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이다. 이처럼 테러방지법은 모호한 법 적용과 불법적인 민간인사찰을 통해 조직 사건을 터트려왔던 국정원의 활동을 합법화할 뿐 만 아니라 확대 강화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셋째 국정원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어 계엄선언없는 계엄상태로 만드는 것이라 할수 있다.
우리는 이미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하여,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된 이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한반도 비상경계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것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군과 경찰의 무기사용권과 군병력까지 동원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계엄선언없는 계엄상태로 만들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 **김정일**국방위원장 서울방문에 장애를 조성할 소지가 농후하다 할수 있다.

하여 통일연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 훼손 법안으로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테러방지법은 제 2의 국가보안법,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테러방지법은 민족의 화해화 협력을 훼손하는 법안이기에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01년 11월 19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발표한 테러방지법(안)은 그 법규정의 애매모호성과 반인권성으로 하여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될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서 각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안)에서는 ≪테러≫를 ≪정치적 · 종교적 · 이념적 · 민족적 ·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는 국가중요시설이나 주한 외국정부 시설의 점거가 포함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행위나 정치적 시위행위조차도 테러로 규정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에는 ≪허위신고의 처벌≫, ≪불고지죄≫, ≪구속기간의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다. 특히 ≪불고지죄≫는 그것의 반인륜성으로 하여 이미 국가보안법에서조차도 사문화되어 버린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는 그것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그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내에 대테러센타를 두고 의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결국 법안의 기안자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놓았다.

또한 대테러센타에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권마저 부여함으로써 그간 인권시비에 숱하게 휘말렸던 국가정보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테러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테러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리하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결국 테러방지법의 입법의도 자체가 보수언론들에 의해 이식된 국민들의 테러공포심을 악용하여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흉계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게 한다.

과거 국가정보원(구 안기부)이 나서서 수사한 테러사건 중에 그 진상이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KAL기 폭파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숱한 의혹만을 남겨 놓은 채 사건이 종결되어 아직도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우리 민중들의 삶을 옥죄어올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할 흉계만을 꾸밀 것이 아니라 자진해체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01년 11월 2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누가 우리의 일상을 비상사태로 만드는가

토론회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 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일 국정원에서 공고한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정원의 의도를 분석하고 제 민주 · 사회단체의 테러방지법안 반대의견을 한데 모아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국정원이 제시한 10일간의 의견수렴시간을 하루 앞두고, 내일까지죠? 정말 긴급하게 모였다≫는 사회자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씨의 말처럼 절박함이 느껴지는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는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하더니 9월 11일 미국의 테러사건 이후 국내 경계령 공포 및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데 통탄해하지 않을 수 없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아예 반대해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로 인사말을 대신한 통일연대 홍근수 상임의장의 지지격려의 말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된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교수의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발제에서 ≪현재 테러방지법은 전문 33개조와 부칙 5개조의 비교적 적은 분량이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법은 테러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비상입법이라고 하겠는데, 헌법의 절차에 따른 비상사태 선언도 없고, 그에 대한 통제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경찰내부의 대테러 특수부대들이 조직되어 있는 등 충분한 방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테러를 이유로 정보력,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는 의도에 대해 ≪햇빛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현 시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남북긴장완화로 약화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1996년 말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이후 인기부의 수사권이 회복된 전례가 있다≫며 국정원이 모든 경찰, 정보기관의 지휘자로 등장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법안에서도 테러개념의 모호함,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 테러센터 구성에서 군 · 경 등 9개 부처를 아우르는 국정원(국정원장)으로의 권력집중, 군병력의 동원시 국회에 통보만하게 되어 있는 점 등 기본 헌법을 수정해야만 가능한 상황들이 제출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교수의 발제에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인권운동사랑방 상임연구원 박래군씨는 ≪법안에 문제점이 많다. 국가보안법의 원형이다. 국정원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고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것이다.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예고 10일에 공청회 한번 없고 정기국회에서 해치우겠다는 발상이 권위주의적 발상이다≫며 국정원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며 발제자 의견에 적극 동조했다.

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정대연씨는 ≪미테러 유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복지수준 하락, 노동시장유연화, 80% 빈곤화… 자본의 이윤적 극대화에 따른 민중생존권이 파탄은 필연적이다.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패권정책을 국내에서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DJ정권 말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반민주사회분위기와 외세에 대한 충성경쟁 속에서 세계적 낙후와 보수화 움직임의 연관성을 잘 보아야 할 것이다≫며 지금 법제정과 관련한 전반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공안세력들 한총련 대의권 검거를 하고 있으며 학생운동내 조직사건 곧 터질 것이라는 소리도 있다≫며 노동자, 농민 기층민이 저항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 토론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건국대)교수는 ≪나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할 목적이 있고 그것을 알리기 위한 이곳에 늦지 않기 위해서 난폭운전으로 시민을 위협함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소속된 참여연대는 이런활동을 계속할것이며 건국대는 내게 월급을 주고 있다≫며 두리뭉실한 ≪테러≫라는 테두리로 모든 사람에 대해 유추 · 확대해석될 가능이 크다고 심각한 우려를 포명했다. 또한 대통령-총리-각부처 장관의 책임지는 행정라인에서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정원장-지역본부의 라인을 형성하며 사실상 국무총리도 제외시킨 대통령-국정원장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바뀌게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있은 자유 토론 역시 언론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과 테러방지의 근본적인 원인을 잘 따져보는 것,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만드려는 계획에 편승되지 말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출됐으며 이후 토론회 참가자들의 테러방지법(안) 철회의 의지를 모아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박미영 기자 2001년 11월 21일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

국정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폭압의 그림자가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 12일 이후 불안과 공포는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헌법 무시, 인권 유린 그리고 막강한 정보기관이라는 과거의 악몽이 바야흐로 ≪테러방지법≫연대 통과라는 음모속에 노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목도한다.

≪테러방지≫. 그런 명분뒤에 가려진 국정원의 의도가 권력의 대폭 확대 · 강화에 있음은 이제 누구의 눈에도 확연하다. 테러방지법안을 살펴보아라.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이 국정원장이다. 국정원내에 대 테러센터가 설치될 뿐 아니라 그 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떠오르는 ≪테러의 시대≫에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국정원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정원은 또한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국정원이 말하는 ≪테러≫는 광범위하고도 모호하기가 짝이 없다. ≪정치적 · 종교적 · 이념적 · 민족적 ·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 주장을 널리 아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제2조)≫가 바로 ≪테러≫라는 것이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이런 테러 규정이 또 하나 ≪코걸이 귀걸이≫식 폭압장치에 다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게다가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 군 병력에 대한 경찰권 부여, 악명높은 ≪불고지죄≫, 구속기간연장, 참고인 구인 · 유치, 무제한의 감청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에 드러난 인권유린의 저의는 부지기수이다. ≪적용의 대상을 최소화 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국정원의 주장은 그들이 언제나 앵무새처럼 부르는 기만적인 상투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경찰의 정보력은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있으며 군대와 다름없는 전투 경찰대와 대테러 특수부대들은 그 무지막지한 진압능력을 국민에게 충분히 과시해왔다. 즉 테러를 통제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 없다고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은 결코 아닌 것이다. 왜 9.11테러와 2002년 월드컵을 틈타 이런 ≪법≫을 얼렁뚱땅 만들려 하는가? 왜 테러를 빙자하며 전국민을 상대로 정보수집과 사회통제를 강화하려 하는가?

국정원의 활동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고쳐 보르게 된 것은 폭압기구에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 명칭변경은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었단 말인가?

폭압의 그림자를 걷어치워라! 국정원은 테러 대책을 발판으로 또 다시 막강권력으로 부활하려는 야욕을 버리고, 테러방지법 제정 지도를 즉각 포기하라!

테러방지법 국민에 대한 테러다. 졸속추진 즉각 포기하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수 없다. 국정원의 권력확대 절대반대한다!
대 테러 전략 거짓말이다. 기본권 유린 결사 반대한다!

2001년 11월 20일
≪테러방지법≫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참가자 일동

누가 국정원을 제정신이라 볼것인가

– 국정원의 대테러방지법 제정시도를 규탄한다 –

테러빙자 대국민 인권테러, 대테러방지법 !

국가정보원은 11월 12일 국가정보원은 테러의 예방 · 방지 및 범인색출 등 전 과정을 규정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테러에 대하여 효율적 ·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가칭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지난 9월 11일에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은 분명한바,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또다시 그와 같은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감에 싸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를 국정원이 절묘하게 파고 들어왔다. 테러예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정원의 수사권을 대폭 확대 ·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1월 15일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21세기의 공안정국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제정 음모라고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주요골자 : 기상천외! 천인공노!

국정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테러의 정의를 ≪정치적 · 종교적 · 이념적 · 민족적 ·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행하는 ① 국가요인 및 그 가족, 각계 주요인사, 외국요인, 주한 외교사설에 대한 폭행 · 상해, 약취, 체포 · 감금 · 살인 등의 행위, ②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 시설의 점거 · 방화 · 폭파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 · 폭파 행위, ③ 항공기 · 선박 · 열차 · 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 · 폭파, ④ 폭발물 · 총기류 · 유해성 생화학물질 · 방사능물질 및 기타 무기 등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무차별한 인명살상, ⑤ 우리 나라가 체결 · 비준한 조약에서 규정한 테러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러대책기구로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테러 대응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위 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두며, 국정원 산하에 국내외 대테러 정보수집, 테러사건 수사 등의 임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테러가 발생할 우려만 있게 되더라도 무력 · 생화학 · 방사능 등 분야별 주무기관에 ≪사건대책본부≫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무력진압작전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특수부대의 운영 ·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 통보만 하게 되면 군 병력까지도 동원이 가능하며, 동원된 군 병력에 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기존 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형기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테러단체 구성 및 가입죄를 신설하여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의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고지죄를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와 관련한 장난전화 등 허위사실 신고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형사소송절차 특례규정인 참고인의 구인 · 유치제도와 구속기간의 연장 또한 테러방지법에 똑같이 도입되어 있다.

그 밖에 테러자금의 거래정지와 외국인 동향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의 임무에 테러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테러혐의자에 대한 긴급감청 기간을 7일 이내로 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테러자금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정말 엄청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인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할 따름이다.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순수히 법적으로만 따지고 들어가더라도 지면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의 정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 시설에 대하여 폭파나 방화 등의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점거까지도 테러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의 수단으로 회사 건물을 점거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국가중요시설의 점거라는 테러행위가 되고 만다. 합법적인 파업인지 불법파업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현 의도대대로 이같은 테러방지법이 무사히(?) 제정된다면, 지난 3월 29일에 있었던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목동전화국 점거투쟁은 명백한 테러행위에 해당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목적 아래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중요시설의 점거이기 때문이다.

군병력 무단동원에, 반헌법적 상시적 계엄까지 허용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단순히 통보만 하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계엄 상황을 제외하고는 군의 출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는 명백한 위헌 규정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테러에 대한 무력진압을 위해 설치되는 특수부대의 경우에도 군인이 포함되는 것이 확실한바, 이는 민간인에 대한 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대로 입법화된다면 계엄 선언 없는 계엄 상황의 상시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의 일상은 늘상 비상사태에서 영위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은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이 그 동안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시비의 핵심에 있어 온 국정원에게 수사권 등 권한을 대폭 확대 · 강화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며,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고 대테러센터의 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대테러대책 활동의 주요 요직을 사실상 국정원이 독점하는 셈이다. 한편으로 테러자금의 거래정지와 외국인 동향관리와 같은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는 없으나 그 동안에 이미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는 것들인바,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이를 정식으로 합법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테러방지법안이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인 테러예방과 대책이 그와 같이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실제로 효과를 가져오게 될 지는 지극히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입법 조치가 없다고 해서 테러방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존재하는 법체계 내에 흠결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대책들이 인권과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결여된 채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을 통해 형성된 전세계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고 졸속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그런데 이 번에 국정원이 정한 입법예고 기간은 단지 10일만으로 되어 있다. 입법제안자의 공청회 한 번 열 예정도 없다. 12월 8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연내 입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세계무역센터 테러에 대한 기억이 시간의 망각 속에서 퇴색되고 잊혀지기 전에 그리하여 충격과 공포를 벗어나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이전에 하루 빨리 입법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는 사생결단의 문제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추진 주체가 하필이면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탄받아 온 국정원이다. 기존의 법령과 현재의 경찰체계만으로도 대테러대책 활동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굳이 국정원에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권 등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입법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비교적 쉽게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인바, 변화된 시대상황 아래 사실상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강력한 국민통제수단의 창출이 바로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이 입법화되면 앞으로는 정권 안보를 위해 사상에 빨간색을 칠해야 하는 수고를 할 필요없게 될 터이다. 엄연한 주권국가인 조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한민국의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계속 매도함에 더 이상 연연할 필요도 없게 된다. 테러범죄로 규정하기만 하면 된다.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구성죄를 대신해서 테러단체 구성죄가 존재한다. 불고지죄도 그대로이고 구속기간 연장 등 특별형사소송규정도 그대로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굳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어야 할 수고도 덜게 된다.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에 의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테러행위로 몰고 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의도 아래 추진되어지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임박해진 작금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진 악법은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간다≪는 국가보안법의 역사가 온몸으로 말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정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인바, 이 땅의 진보운동 진영을 겨누고 있는 그 칼날 끝의 매서움은 국가보안법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 국민 테러를 일삼아 온 국정원은 테러방지 운운할 자격이 없는바, 그러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테러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의 입법화는 무슨 수가 있어도 저지해야 한다. 사생결단의 각오라는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갈망하는 양심인들에게 알리고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투쟁에 시급히 힘차게 결집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사회화와노동 2001 년 11월 21일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국정원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아무런 경과 설명 없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바꿔치기 했음이 21일 드러났다. 새로운 법안으로 바꾸면서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일은 여전히 12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을 수정했다는 어떤 공지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예고 기간이 끝나고 수정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입법 예고 기간 내 법안 바꿔치기는 국정원이 무척 서두르고 있으며,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보여진다.

테러방지법의 새 안은 국정원의 수사권 장악 의도를 꼭꼭 숨기는 데 중점을 둔 흔적이 역력하다. 기존 법안에는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가 ≪테러사건의 수사를 맡는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었으나 새 안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나 새 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에 ≪테러사건의 수사≫(제 1조)가 들어가 있으며 뒤에 가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제 17조). 또한 새 안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테러센터장을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다. 결국 기존 안에서 한눈에 띄었던 대테러센터의 ≪테러사건의 수사≫를 빼면서 새 안에서는 수사권을 이곳저곳에 꼭꼭 숨겨두고 있는 것이다.

기존 안에서 9개 부처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편성하겠다고 한 것이 새 안에서는 10개 부처로 늘리면서 검찰이 새로 들어갔다. 이 또한 대테러센터의 사실상의 수사활동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정원 관계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라 밝혀 국정원이 테러사건수사에 권한을 쥐겠다는 생각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새 안은 인권 · 사회단체의 비판을 일면 수용하였고, 문맥도 다듬었다.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 · 유치 조항이 사라졌고, ≪불고지죄≫조항은 ≪테러범죄신고불이행죄≫로 바뀌었다. 그러나 모호하기 짝이 없는 테러의 개념과 테러단체 규정은 여전하며, 외국인 동향 관리 조항 및 난민 지위를 전연 고려치 않은 테러범인의 인도 조항, 감청 확대 등 인권침해 소지는 여전하다. 결국 국정원의 수사권 장악 의도를 가리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손질을 입법예고 기간 내에 부랴부랴 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국정원장이며, 국정원장이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정보 기관에 머물러야 하며, 테러대책을 발판으로 막강 권력을 부활시키려는 야욕을 버리라는 인권 · 사회단체의 지적에 국정원은 요지부동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22일 차관회의에서 검토된다. 인권 · 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느티나무에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심태섭 기자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권하루소식 11월 22일자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은 한마디로 쇼≫



지난 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진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한마디로 쇼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오전 11시 통일부 북한자료실 6층 TV시청실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가 주관한 KAL기 사건과 관련한 비디오 시청 모임에서 해설을 맡은 현준희(48세, 전 감사원 직원)씨는 이같이 단언했다.

현준희씨는 사건 당시 감사원 직원 신분이었으며, 사건초기부터 KAL기 사건이 조작임을 확신하고 14년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추적해왔다면서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현준희씨는 KAL기 사건을 다시 문제삼는 이유에 대해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실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북.일 국교 수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KAL기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준희씨는 KAL기 사건 1주일만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고 김현희가 일본인 여성 이은혜를 거론한 사실만으로 북.일관계에 큰 걸림돌이 생겨났으며 최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시 KAL기 사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준희씨는 KAL기 사건에 대해 아직도 진상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실종사건≫일 뿐이며, 김현희가 어렸을 때 자신이라고 주장한 사진 속의 주인공의 귀 모양은 김현희의 귀 모양과 완전히 다른 점 등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고 ≪완전히 쇼≫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준희씨는 김현희가 한국에 압송되어 입가리개를 한 채 김포공항에 내린 날이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음을 상기시키고 당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북한 제재안을 부결시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여분씩 상영된 두편의 비디오는 일본 ≪칼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KAL기 사건에 대한 김현희의 주장은 조작이라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측의 입장을 담고 있는데 북한에 거주하는 정희선씨가 출연해 김현희가 자신의 어렸을 때 모습이라고 지목한 사진이 바로 정희선씨 자신이라고 밝히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의 모임에는 KAL기 사건 유가족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당시 A300기 기장으로 고국으로 귀환중 사고를 당한 박명규(당시 54세)씨의 부인 차옥정(66세)씨는 ≪이 사건 이야기만 나와도 지금도 심장이 뛴다≫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없어지면 찾아 나서는데 수색했다고 말만 하고 있지만 못 찾는게 아니라 안 찾는 것≫이라며 정부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차옥정씨는 정부가 유가족들을 반공궐기대회에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만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아직 생사도 몰라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다며 ≪쌓인 의혹들을 죽을 때까지 풀어낼 것이고 진실은 언젠가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기 KAL 858기의 부기장이었던 신태호씨(당시 47세)의 부인 김호순씨(55세)는 ≪미사일로 격추당한 비행기도 유해와 잔해를 찾는데 아직까지 유품하나 없다≫며 ≪김현희 면담 거부는 물론 재판정에도 유가족 몇몇과 안기부 직원들만 들여보냈다≫면서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김호순씨는 ≪보안관계를 철저히 해 수상한 사람은 화장실까지 따라간다≫며 군인출신인 남편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기에 폭파사건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비디오 시청 모임을 주관한 통일연대 관계자는 앞으로 KAL기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사태 진전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情報는 國力이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6

통일 ≪촉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원한다

자민련 법개정 발의에 민변-통일연대 세미나 개최



한겨레신문 11월 10일자 보도에서 ≪자민련은 대북협력사업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서명을 받아 1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된 바 있다.

21일, 통일연대·민변이 주최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주관한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와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12월 9일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위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자민련·한나라당의 위험스러운 발상에 법조계, 정치계, 운동단체의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주목을 끌었다.

남북교류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을 법 조항으로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은 90년대 제정된 후 변함 없이 유지되어온 것으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햇볕정책, 공동선언을 계기로 활발해진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해 개정 필요성을 제기 받았던 법 조항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교류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법 개정의 옳은 방향을 찾는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지난 시기 소수의 방북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을 시사한 김인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방북을 희망하는 이 때 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 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에 기반해서 개정해야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엄연히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역할은 국가보안법이 해왔다는 문제지적을 한 후 ≪해석론으로 국보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보법을 남북관계의 특별법으로 자리매김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그는 법 개정방향에 있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문제 ▲남북교류를 추진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관련 민간인 전문가 참여 ▲남북교역에서 무관세 적용이 WTO 위반이라는 논란을 감안,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는 방안 마련 등을 주장하며 진작 중요한 것은 통일의 주체를 세우기 위한 개정임을 시사했다.

외교통상위에서 활동중인 김성호(민주당)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류협력법은 자민련-한나라당의 규제강화차원과 민주당내 이창복의원이 주장하는 규제완화책이 있다며 현실적인 의석수를 밝히며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당리당략에 따라 표류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남북교류에 있어 국회승인을 지나치게 주장한 점은 남북교류에 발목을 잡을 뿐이라며 올바른 법개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과 하루에도 몇 번씩 접촉한다≫는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방북신청을 위해 범민련으로 북 초청장 의뢰를 해온 단체들이 많다≫며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경로를 명확히 마련해야지 모르쇠로 일관해서 안된다며 통일부의 일관성 없는 방북접수를 비판했다. 민처장은 평양행사 관련한 방북인사 구속에 대해 범민련 일부 성원만 구속시킨 것은 또한 일관성 없는 집행이었다고 규탄했다.

김창수(민화협) 정책실장은 민화협 차원에서 교류협력에 관한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밝히며 이 법안과 관련, ≪9조 ≪남북한 왕래≫ 승인 사항 변경과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단체 허용 요구를 정기국회 즈음 청원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류협력법이 제기된 배경을 주장한 정성희(민주노동당) 위원장은 ≪공동선언 이후 활발해진 남북교류에 위협을 느낀 수구보수세력들이 남북화해무드에 찬물 끼얹기를 시작했다≫며 ≪반드시 화해를 촉진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법 개정은 추진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영제 통일국장은 교류협력법의 ≪전면개정≫을 주장하며 분단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통일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의 법률이 논의돼야한다고 말했으며, 이정식 한국노총 위원장은 방북전 정부가 시행하는 교육은 반공교육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남북협력을 외치는 정부의 원칙 없는 방북정책을 꼬집었다.

참석한 사람들은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민의에 기초한 당정을 촉구하며 통일을 ≪촉진≫하는 법개정이 이뤄지길 입모았다.

백영순 기자 2001년 11월 22일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떠들어 댄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2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지난 9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미국이 아시아의 중요성, 한국의 중요성, 미군주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은 미국침략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우리 민중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속담에 **이 3년 묵으면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해안 건너의 미제침략군이 한두해도 아닌 반세기가 넘도록 남의 집안방에 틀고 앉아 있으니 이보다더 더 파렴치한 불청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은 우리 민족이 요청한 바도 아니고 시대적 요구도 아닙니다.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과 식민지지배로 우리 민족은 광복과 독립의 기쁨을 미쳐 맛볼 사이도 없이 자주권을 무참히 빼앗겼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일제식민지통치보다 더 긴 기간의 식민지지배를 통해 한국을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철저히 예속시켰습니다.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미군의 장기주둔으로 우리 민중이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은 이루말할수 없고 한반도에서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져 일어날수 있는 위험한 정세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또다시 대결원점으로 돌아갈 위험마저 안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였다면 한반도는 애당초 분열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겨레는 이미 오래전에 통일민족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끝장나고 주한미군이 철수될 때에만 우리 민중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고 우리 겨레가 그처럼 바라는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하여 오늘 이땅에서는 주한미군이 더 주둔할 명분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6.15공동선언은 주한미군을 이땅에서 몰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겨레의 일치한 요구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계애국민중은 미군의 장기주둔의 필요성을 계속 역설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으려는 미국의 속셈을 똑바로 헤아려보고 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족의 가장 전동록씨의 사지를 빼앗은 주한미군에 대한 규탄 성명서



얼마전 뉴스와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한미군의 기지에 쳐진 고압선에 우리의 또 한명의 아버지가 다치신 것이다. 주한미군은 자기 맘대로 이땅에 발을 들여놓은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민중들에게 고통만을 주고 있다. 과거 주한미군은 우리 누이를 강간한뒤 질에 우산대를 찔러 넣어 죽였고, 아무런 죄도 없는 학생에게는 등 뒤에서 칼을 꽂아 죽였으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은 지뢰를 밟아 다리가 날라가고, 폭탄소리 · 총소리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던 주한미군이 이제는 죽음의 선, 고압선을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쳐놓고 우리 민중들의 목숨을 죄어 오고 있다.

고압선의 위험성을 분명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대책마련에 소홀히 했다. 그로 인해 한가족의 가장인 전동록씨의 사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것에 우리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는 분노를 감출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 조심하지 않은 사고 당사자의 잘못이다라는 망발까지 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단돈 60만원을 건네주며 배상서류를 전달한 주한미군의 작태에 강력히 항의한다. 한 가족의 가장의 사지를 빼앗아 놓고,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사고원인의 책임과 사고이후의 후과에 대한 책임까지 당사자에게 떠 넘기고 있는 주한미군은 당장 만행을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주한미군의 이런 처사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 한국 민중 없이 법이 존재할수 있는가? 한국 민중 없이 정부가 있을 수 있는가? 한국 민중 없이 나라가 있을 수 있는가? 민중 없이 어느것도 존재할수 없다. 이점을 서울 지방 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일로 SOFA협정의 부당함에 대해 또 한번 느낄수 있었다. 한국땅에 있는 전기선인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기지의 담벼락에 놓여진 전기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전시설 하나 설치 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통곡을 하지 않을수 없다.

SOFA협정이 개정되거나 폐기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언제 어디서 이와 같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는 SOFA협정을 반대하며, 주한미군이 철수 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주한미군은 분명 이 땅에서 떠나야 하는 존재이다. 남의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인행세 하지 말고, 자기 나라나 잘 지켜 또 다시 테러사태와 같은 사건으로 미국 민중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 민중들을 핍박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철수하라!
주한미군은 전동록씨와 그의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주한미군은 미군기지 주변에 쳐놓은 전기 나선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라!
법원은 전동록씨의 사고를 공정하게 판결하여 한국민중의 권익을 보호하라!

전동록씨의 아드님이 단국대학교 97학번 학우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되지 않는 이상 우리 민중 어느 누구도 주한미군의 범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 진 것입니다. 전동록씨의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더불어 힘내어 끝까지 투쟁하시라는 말을 전합니다.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는 가족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그날까지 청년단국 학생위원회는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청년단국 학생위원회

전동록씨 피해 보상!
미군기지 즉각 반환하라!



지난 7월 16일 켐프 하우즈 후문 인근 공사장에서 미군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를 절단한 전동록씨를 보며 슬픔과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

당시 공사 관계자들이 공사 시작 전부터 수 차례 미군부대에 고압선을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매번 묵살당했다. 심지어 사고 3일 전에도 미군부대 관계자가 나와 현장을 들러보았지만 괜찮다는 말 뿐이었다.

그것이 결국은 큰 화를 부른 것이다.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사고 이후 미군 측이 보인 태도에서다. 사과 한마디 없이 의례적으로 위로금 60만원과 배상서류만 건네주었을 뿐이다. 끔찍했던 사고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 문제의 고압선은 지금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이번 사고는 미군측이 고압선 이설에 대한 요청을 묵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안전사고라기보다는 미필적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특히, 당시 고압선은 피복도 되어있지 않은 나선이라 피해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음에도 미군 측은 자체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만한 제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군 규정 이면에 고압선 철거 및 교체에 드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는 미군측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알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받아가면서도 사람 죽이는 전쟁연습에만 쓸 줄 알았지, 한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밝혀진 바와 같이 스토리 사격장 주변 산림 훼손 등 미군기지와 훈련장을 둘러싼 주한미군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왜 미군기지를 돌려 받아야 하는지, 왜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야 하는지를 절절히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바에 따르면, 파주지역에서 반환 예정인 공여지에 다행히 이곳 켐프 하우즈는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던 스토리 사격장은 빠져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미군기지가 이곳에 남아있는 한 주민들이 하루도 마음놓고 살 수 없는 현실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미군 당국은 전동록씨 고압선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라!

– 미군 당국은 미군 고압선 나선에 대한 피복선으로의 전면 교체 드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폐기하고 스토리 사격장을 비롯, 전국의 모든 공여지를 반환하라!

–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전쟁연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주한미군은 즉각 이 땅을 떠나라!

2001년 11월 17일

불패의 그이름 8기 경인총련

≪캠프 하우즈≫ 최초의 반미 집회

전동록씨 사지 절단에 위로금 60만원



사지가 잘려 나갔다. 사지뿐 만 아니라 한쪽 귀마저 멀어졌다. 한사람이 이 정도의 부상을 입었더라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족히 몇 억을 치료비로 보상하고 가해자는 감옥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위로금조로 60만원만을 던져주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한국경찰의 보호아래 총든 군인의 보호아래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지난 7월 16일 건설현장 인부였던 전동록씨(54세,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5리)는 파주 ≪캠프하우즈≫라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피복이 되지 않은 22,800볼트 고압선에 감전되어 양쪽 사지와 한쪽 청력을 잃어버렸다. 공사장 인부였던 전동록씨는 캠프하우즈 미 제2사단 공병대대 후문 옆 대우제판 카메라 조립식 공장 증축현장에서 마지막 지붕철판을 얹기 위해 5.5미터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채 1미터도 되지 않은 위치에 미군부대 쪽에서 흘러나오는 피복이 안된 고압선에 감전된 것이다. 공사전 건물주와 이장이 미군 측에 ≪공사를 해야하니 고압선을 치워 달라≫고 수차례 부탁을 하였지만 미군 측에서는 반응도 하지 않았고 끝내 사건이 난 것이다.

11월 17일 오후 캠프 하우즈 정문은 평온하였다. 정문 앞에는 영어간판 술집 몇 채만이 업무 시간후 미군을 기다리고있을 뿐이다.

오후 2시부터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 경기 민중연대, 파주 환경연합, 민족화해 자주통일협의회,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파주 주민, 항공대 학생들, 단국대 사회과학 동아리 ≪노둣돌≫ 회원 등 70여명이 캠프 하우즈 정문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캠프 하우즈가 생기고 처음으로 집회가 진행되는 순간이었다.

곧이어 2시 30분 민주노동당 이승헌 자주통일국장 사회로 사전 집회가 시작되었다. 사전집회는 항공대 학생과 단국대 사회과학동아리 ≪노둣돌≫ 학생이 ≪주한미군과는 같은 하늘아래에서 살 수 없다≫며 힘찬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특히 단국대 ≪노둣돌≫에서 나온 학생은 전동록씨 둘째 아들이 같은 동아리 회원이라고 밝히면서 미군이 사과와 보상을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3시부터는 성남 민중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신건수씨 사회로 본 집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사에서 민주노동당 일산 갑 지구당 심만섭 부위원장은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이 투쟁을 전개하자≫고 대회사를 열었다.

이어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손해배상 문제로 소송을 준비중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소희 사무국장이 그 동안의 사건 경과를 보고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던 사람은 전동록씨의 큰아들 전민수씨 였다.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전민수 씨는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아버지의 팔다리를 돌려 달라는 것이다. 한 가정을 파탄내고 우리 아버지의 사지를 빼앗아간 주한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한다≫라고 말해 참가자들 중 일부는 눈물을 훔쳐야만 했다.



이어 자통협의 김종일 사무처장과 경기민중연대 최근호 상임집행위원장이 나와 ≪매향리 투쟁은 주민과 각계 각층의 연대 투쟁으로 승리를 만들어 왔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각계각층이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자≫며 집회참가자들의 결의를 다졌고 마지막 연사로 나선 파주 장파리 정인호 이장은 ≪그동안 파주에서만 수많은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가 있었다.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싸워야 한다≫며 결의를 밝히었다.

마지막 순서로 경기동부연합 김기창 의장의 항의서한 낭독이 있었고 이어 전민수(전동록씨 큰아들)씨, 자통협 김종일 사무처장, 주한미군 범죄운동본부 이소희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이승헌 자통국장 등 4명의 대표단이 부대 책임자를 만나 항의서한 전달과 부대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다.

조금전까지 만해도 부대 민사과장이 나와 면담에 응하겠다던 미군 측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상부의 지침으로 면담과 항의서한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해와 집회 대오는 이에 항의하면서 미군부대 정문으로 돌진하였고 이를 막고자 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병력은 계속 증강되면서 미군부대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미군 측에서는 면담에 응하겠다며 대표단을 정문초소로 안내하였고 공병여단 본부중대장인 박대위(Park Andrew. Y)가 부대 책임자로 나왔다.

대표단은 첫째, 항의서한을 여단장에게 전달하고 문서로 답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군 측의 방침이 있는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위는 분명히 여단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그 답변을 문서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고 두 번째는 자기 선에서 답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이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서한을 받았다는 사인을 요구하는 대표단의 요구에 대해 박 대위는 사인은 할 수 없고 신분을 명확히 밝힌다며 신분증을 내밀었다. 대표단은 박 대위의 신원을 확인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가 없을 때에는 이곳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전동록씨의 큰아들 전민수씨는 ≪우리는 이곳에서 부당한 미군의 처사에 항의하러 왔는데 부대를 지키는 미군 병사들은 비웃 듯이 실실 웃고만 있었다.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나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박 대위는 ≪주의를 하겠다≫고 답하면서 대표단 면담은 종결되었다.

부대 정문에서 대치중이던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미군의 사과와 보상, 더 나아가서는 미군기지 반환 그날까지 투쟁을 전개하자며 저녁 노을과 함께 캠프 하우즈가 생긴 이래 첫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용인, 성남, 하남, 수원 등 수도권 각지에서 모였으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튼튼한 연대를 나누었다.

이승헌 (민주노동당 통일국장)
통일뉴스 2001-11-19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폐기하고 부평미군기지 즉각 반환하라!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 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당국은 도심 미군기지 시설 확장 문제에 관한 논의와 합의를 이루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 용산에 있는 1만4천평 규모의 캠프 킴 등 서울지역 4곳, 경기도 3개 지역 미군 훈련장 등 모두 4044만5천평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쪽에 반환≫된다고 한다. 그대신 ≪한국은 주한 미군기지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 캠프 스탠리 부근 24만평, 오산비행장 주변 24만평, 평택지역 17만평, 포항지역 10만평 등 4곳에서 모두 75만평을 매입해 미군쪽에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춘천 캠프 페이지, 부평 캠프 마켓, 대구 캠프 워커 일부 등 3개 기지에 대해 내년 3월 중순까지 추가 반환협상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용산기지≫를 비롯해 주민들의 폐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매향리 사격장, 파주 스토리 사격장, 파주 장파리의 다그마노스 훈련장 등은 이번 반환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2조원 가운데 1조3천억~1조4천억은 미국쪽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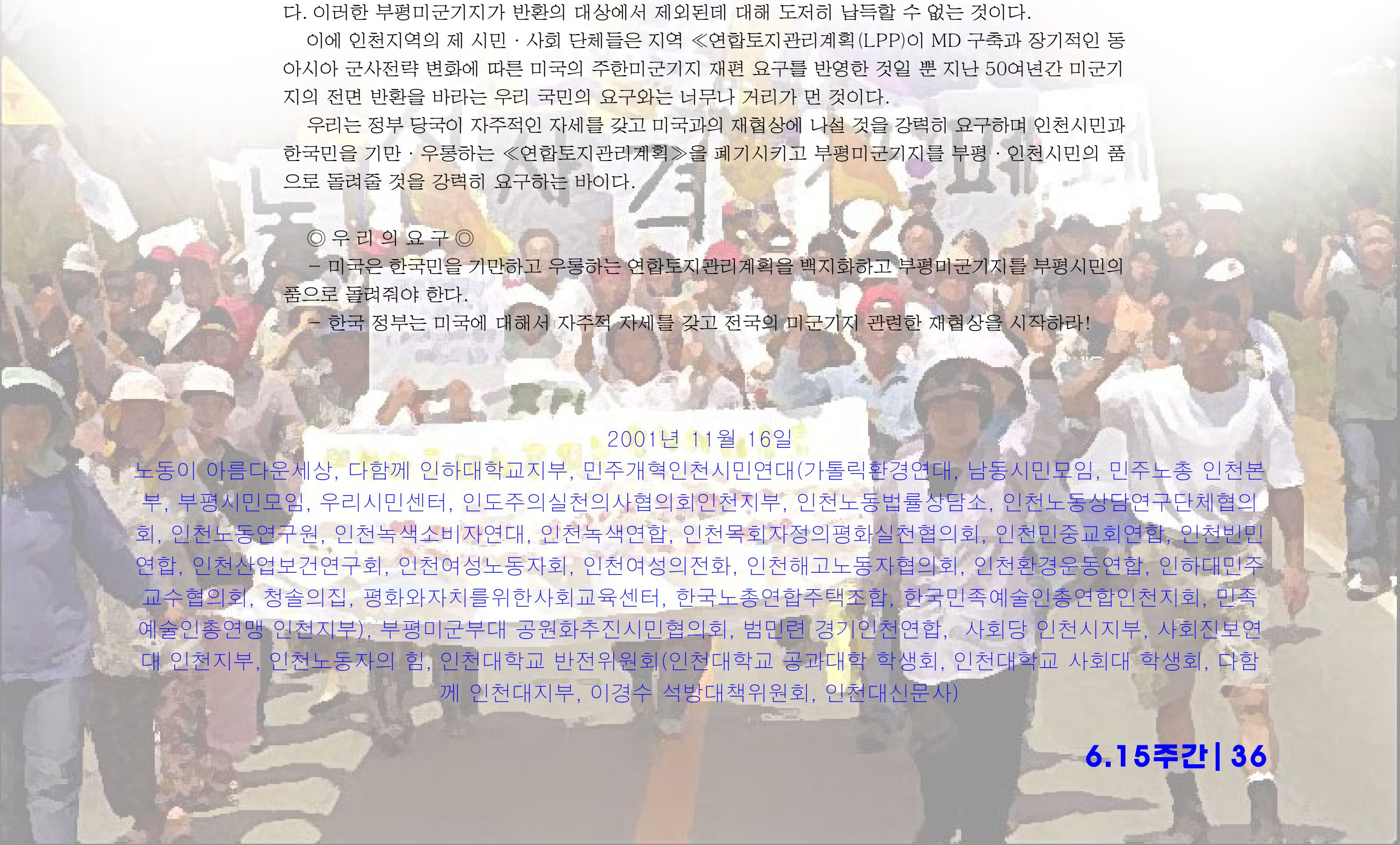
우리는 미국측과 한국 정부 당국 사이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합의가 미군기지 이전 · 반환 · 미군철수 등에 대한 한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한국민에 대해 기만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미국측이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4000여 만평의 공여지 중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사용되지 않는 지방 야산의 훈련장들로서 미국 자신에게 쓸모가 없는 공여지들이다. 더구나 3500 만평은 사유지로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미군에게 공여된 것이라는 점에서 벌써 오래 전에 주민들에게 반환되었어야 마땅한 것들이었다. 특히 국방부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반환 부지 선정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했다고 하나 실제 주민들과 국민들 사이에 폐쇄 요구가 높았던 매향리 사격장, 스토리 사격장, 다그마노스 훈련장에 대한 반환이 제외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 부평미군기지의 경우 부평 지역의 노른자위 땅 16만 1천평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도 현재 미군 9명(가족 포함 40명) 한국인 노무자 400여명, 카츄사 10여명뿐이며 그 역할도 인쇄, 제빵, 폐차 등 군사지원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의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군사적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다. 이러한 부평미군기지가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의 제 시민 · 사회 단체들은 지역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MD 구축과 장기적인 동아시아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재편 요구를 반영한 것일 뿐 지난 50여년간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 자주적인 자세를 갖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인천시민과 한국민을 기만 · 우롱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폐기시키고 부평미군기지를 부평 ·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우 리 의 요 구 ◎

– 미국은 한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백지화하고 부평미군기지를 부평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 자세를 갖고 전국의 미군기지 관련한 재협상을 시작하라!

2001년 11월 16일

노동이 아름다운세상, 다함께 인하대학교지부,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가톨릭환경연대, 남동시민모임, 민주노총 인천본부, 부평시민모임, 우리시민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노동법률상담소, 인천노동상담연구단체협의회,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산업보건연구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청솔의집, 평화와자치를위한사회교육센터, 한국노총연합주택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민족예술인총연맹 인천지부), 부평미군부대 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범민련 경기인천연합, 사회당 인천시지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노동자의 힘, 인천대학교 반전위원회(인천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인천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다함께 인천대지부, 이경수 석방대책위원회, 인천대신문사)

연합토지관리계획 반대하며 춘천 캠페이지 즉각 반환하라!

- 춘천민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우리는 기만적인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연합토지관리계획 반대하며 진정한 춘천캠프페이지의 반환을 촉구한다.≫

- 춘천시민의 요구를 묵살한 ≪추가반환협상 대상 지역 결정≫을 규탄한다.

미국은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워싱턴에서 지난 14~15일 양일간 가졌다. 이 협의회결과에서 밝힌 미군기지 및 훈련장재배치계획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반환 4천44만5천평이라는 전체 공여지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춘천의 미군기지는 춘천시민의 그동안 보여준 요구와 바램을 무시한채 반환 추가 협상지역(19.3만평)으로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기만하였다.

미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헤치는 주한미군의 감축과는 상관없는 미사일방어체계(MD)라고 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서 기인한 미군의 효율적 미군기지 재편 일 따름이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은 그들이 말하는 공여지의 절반의 반납이 양적축소라고 의미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지로는 도심지역 금싸라기 땅을 75만평이나 새로이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무단으로 강점하고 빼앗은 우리땅에 대한 우리국민의 요구인 미군기지반환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춘천캠프페이지의 공여지는 573,396평에 이른다. 이 공여지로 인하여 춘천시민들은 50년간의 직간접인 피해를 입어왔다. 도시의 기형적발전과 소음과 환경공해, 범죄행위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그들이 부담해야 할 이용료(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전국토지는 93개 기지, 7천4백 45만평이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된 동 재산들의 연간사용료는 약 4천 5백 57억으로 추정. 2000 국감자료)는 고사하고 오히려 주둔비분담금으로 혈세를 빼앗아가며 존재해 왔다. 그러므로 기만적인 공여지 일부반환이나 반환을 미루는 미국의 작태는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 국방부 및 춘천시의회는 성실하게 춘천시민의 요구를 담아내야 한다.

춘천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춘천시민과 춘천시민단체에서는 줄기차게 춘천시 및 의회와 연결하여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요구를 모아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전비용 분담금으로 무려 3300억의 돈을 요구하였으며 이것이 준비되지 못하며 반환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이것은 현재 2조원의 분담금이 드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서 한국측 부담금액인 7000억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요구는 춘천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협상의지는 고사하고 요구를 묵살하는 작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국방부 및 미국측에게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은 2002년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전년 33%나 증액시킨 5억8천만 달러를 요구한 상태이며 년간 액수가 부동산 지원 세금면제 등의 간접 지원비까지 합하면 무려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주한미군은 마땅히 소파협정에도의 규정한 주둔비 전액을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보더라도 춘천캠프페이지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단순히 공여지 일부분을 돌려받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 춘천시민의 원하는 것은 캠프페이지의 완전한 반환이다. 또한 부당하게 피해 입어온 분담금 문제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2000년 33차에 걸친 주한미군기지되찾기 1만인 서명운동에서 보여준 서명의 결과와 관심에서 보여지듯 미군기지는 완전히 반환되어야 하며 이전비용 운운하는 미군의 기만적인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에서 밝힌 연합토지관리계획 합의내용에 관해 춘천시민의 민의와 춘천민주사회단체협의회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하나.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 75만평 요구 철회하고 전면적 기지반환 협상을 진행하라.

둘. 이전비용 운운, 반환협상연기로 기지반환 요구 무시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셋.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부당한 국방비 증액요구를 철회하라.

넷. 국방부와 춘천시의회는 미군기지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입장과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2001.11.17

춘천민주사회단체협의회

(춘천시농민회, 춘천민예총, 강원대민주동우회, 춘천교구카톨릭대학생연합회, 춘천사랑청년회, 통일을 여는 청년모임, 강원대학교총학생회,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부산 미 하얄리아 부대는 이전이 아니라 즉각 해체 · 폐쇄되어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동신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15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주한미군 기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약 4천만평의 땅이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산에 있는 미 하얄리아 부대 부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얄리아 부대 관련 건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딱히 환영할 만한 일도 못된다. 오히려 이번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요, 부산 시민들을 속이는 기만극에 다름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 하얄리아 부대는 이전이 아니라 즉각 해체 · 폐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얄리아 부대 땅 반환을 위해 투쟁해 온 것은, 하얄리아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부대를 해체하고 그 부지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외세인 미군 부대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하얄리아 부대 이전은 해당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불씨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하얄리아 부대가 이전해 간다면, 새 지역의 주민들이 미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은 뻔하다. 이는 지난 몇 해 전, 미군부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부산 강서구 녹산동 주민들의 미군부대 전입 반대 투쟁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새로운 지역의 주민들이 ≪너네 동네에는 있으면 안되고 우리 동네에는 있어도 되냐?≫고 따져 묻는다면, 그동안 하얄리아 부대 반환을 위해 투쟁해온 부산 지역 단체들은 본의 아니게 그 지역에 피해를 주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아무런 군사적 가치가 없는 남의 나라 군대인 주한미군 때문에 우리끼리 갈등을 빚는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셋째, 막대한 이전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부산시의 재정은 엄청난 적자 상태에 놓여있다. 해마다 예산의 일부를 빚 갚는데 탕진할 정도이다.

지난 96년 한미 양측이 하얄리아 부대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서(LOA)에 서명하고도 결국 이전 비용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미군 측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적이 있다.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될 개연성이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 그 핑계를 대고 미군 측은 계속 현 위치에 눌러 앉아 있을 가능성 또한 높은 것이다. 우리가 왜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미군 측과 벌여야 하는가.

넷째, 주한미군 주둔을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반세기가 넘었다. 주한미군 주둔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유발의 원인이며 평화 정착의 걸림돌이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는 범죄의 온상이요,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수없이 많은 고통과 희생을 당하고 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하얄리아 부대도 해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2011년까지 주한미군이 있어도 된다고 말했는가. 제 멋대로 남의 땅을 빼앗아 차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꼼수 부리고 말고 어서 이 땅을 떠나라! 좋은 말로 할 때 떠나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주한미군 측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거하는 해 2001. 11. 17.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 부산본부

SCM 결과 ≪국민염원 저버렸다≫

-사회단체 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가져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12개 사회단체는 지난 14,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가 ≪국민염원을 저버렸다≫며 16일 오전 11시 30분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졌다.

SCM 결과 ≪국민염원 저버렸다≫



16일 발표된 SCM 결과는 그간 사회단체들의 관심과 우려했던 사항들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10.4% 인상 ▲연합토지계획(LPP)주한미군 공여지 4,044만 5천평 반환과 새로이 도심의 75만평 미군 제공(비용 2조원 가운데 7천억원 한국 부담) ▲비전투병 파병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정현(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연합토지계획은 MD구축과 장기적인 동아시아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재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즉각 백지화 하고 재협상 할 것을 한미 당국에 요구했다.

또한 합의된 4천 만평은 이미 반환돼야 했던 땅으로 그 대가로 도심지 땅 75만평을 새로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반환될 4천 만평에는 용산 미군기지, 매향리 폭격장, 파주 스토리 사격장 등 그간 반환요구가 계속돼 왔던 곳들이 반환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번에 합의된 내용과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문정현 상임대표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4조 2천 억원에 달하는 차세대 전투기(F-X)사업과 관련해 미 보잉사의 F-15K의 구매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한 무기 구매 압력을 즉각 중지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참가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소파개정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예상했던 그대로≫라며 ≪국민염원을 저버린 결과≫라고 한마디로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했다.

또한 김판태 사무처장은 이후 논의를 통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투쟁에 반미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이 입장의 차이를 넘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평당 60원에 빼앗긴 밭, 미군은 무상으로 주민들은 230원씩 임대료 지급하고 사용≫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단체 회원들은 김용한(미군기지공대위)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곧바로 규탄집회에 들어갔다.

규탄집회에서 문대골(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와 전만규(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의 한미연례안보의 결과에 대한 규탄연설을 했다.

전만규 위원장은 ≪평당 60원에 국방부에 빼앗긴 밭을 미군은 무상으로 주민들은 230원씩 국방부와 화성시청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다≫며 한미당국을 비난했다.

이어 김종일(매향리범대위) 집행위원장의 회의 기간동안 진행했던 투쟁 상황보고가 있었다.

규탄집회를 통해 투쟁결의를 다진 참가자들은 ≪US troops out of korea!≫을 외치면서 녹사평역까지 행진해 녹사평역 기름유출과 관련한 녹색연합 김재남 사무처장의 규탄연설을 들었다.

한편 행진과정에서 미군들이 카메라를 들고 곳곳에서 사진을 찍는 행동 등을 해 집회 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국방부 앞에서 실천연대 권오창 공동대표와 전국노점상연합 장봉주 부의장 등의 규탄연설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회의의 결과는 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대로 우리정부의 비자주적 자세와 협상력 미흡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6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이북을 악랄하게 걸고 든 것과 관련해서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3일~14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회창은 지난 8일 악질적인 반공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안보강연회에 나타나 현정권의 햇볕정책을 비난하면서 *** **에 걸고 드는 망동을 부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과할수 없는 것은 그가 무엄하게도 이북에 대고 테러주의와 결연해야하고 그 첫걸음으로 KAL기, 아웅산폭파 등 과거의 테러를 시인하고 진실로 사과하라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이회창의 이러한 망발은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공조하에 이북에 테러국의 모자를 씌움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날로 높아가는 이북의 위상을 허물어보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의 햇빛을 가려보려는 것과 같은 가소로운 망동이라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폭로된 바와 같이 이회창이 들고 나온 KAL기사건과 아웅산사건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북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보모략군들의 협약자연극인 것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정보모략군들의 협약자연극으로 낙인된 KAL기사건과 아웅산사건을 들먹이면서 북을 또다시 걸고 들었는데 그러나 이에 귀기울일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온 국제사회가 공인하다시피 이북은 평화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나라로써 민중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회창따위가 제아무리 낡은 보따리를 들려쥐어 북을 중상하려고 책동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회창의 금번 망발은 또한 이북을 자극시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려는 반민족, 반통일적 망발이라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6.15공동선언발표후 오늘의 남북관계는 일련의 우여곡절은 있지만 시대와 민족의 지향에 따라 전례없이 좋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회창만이 이를 배아파하며 극구반대하고 있습니다. 4.8합의서가 발표될때 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 것이 하나도 없다느니 뭐니하면서 합의서 자체를 시비해 나선 자도 이회창이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됐을때 공동선언의 자주적 통일부분이 주한미군철수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고 비난해 나선 것도 이회창입니다.

그뿐 아니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북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진행될때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거는데 앞장선 것도, 평양에서 있은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단인사들의 활동을 문제시해서 그들을 사법처리해야한다고 반기를 들고 나온 것도 다름아닌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보를 지닌 이회창이기에 오늘 날로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가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또다시 북을 자극하는 망발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회창은 제아무리 날뛰어도 날로 좋게 발전하는 남북의 통일기운을 가라앉힐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회창이 계속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겨레의 염원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분별없이 날뛴다면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회창의 금번 망발은 또한 이북에 테러국의 모자를 씌워 압살하려고 광분하는 부시행정부의 돌격대로 나서서 그들의 지지밑에 차기 대통령감투를 써보려는 속셈에서 출발한 비열한 망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회창은 이렇듯 터무니없는 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오래전에 민족의 명부에서 반민족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제명한지 오래입니다. 이회창은 허황한 꿈에서 깨어나 친일친미사대매국행적의 진상을 국민앞에 까밝히고 정계에서 퇴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북대결에 명줄을 걸고 있는 이회창

천용만 / 구국전선 제460호, 주체90(2001)년 11월 21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또다시 6.15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거는 망발을 해서 국민들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민족자주선언이고 통일의 이정표이다. 때문에 이 선언은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민족반역자인 이회창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헐뜯어 왔으며 공동선언정신에 어긋나게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해 왔다.

그런가 하면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보법≫철폐를 악랄하게 반대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두고 이북에 ≪퍼주기 식≫이라느니 뭐니 하며 비방중상하는 등 온갖 반민족적, 반통일적인 언동을 일삼아 왔다.

그런 그가 최근 또다시 주제넘게 ≪상호주의≫를 ≪대북정책의 기본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떠든 것이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아 보려는 또 하나의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온 겨레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고 있는 때에 ≪상호주의≫를 대북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떠든 것은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망발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내부문제인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고 하는 때에 ≪상호주의≫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정치인으로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상호주의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써 같은 민족안의 남북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 등가교환의 방법을 적용하려는 것부터가 민족반역행위이다.

통일위업은 하나의 공통된 민족적 이념에 기초해서 서로 화해, 협력하고 단합해야 실현할 수 있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데 관한 쌍방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이북의 변화를 전제로 한 ≪상호주의≫를 운운하는 이회창이야 말로 추악한 속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회창이 이런 반통일궤변을 일삼고 있는 것은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대권을 쥐어 보려는데 그 흉악한 속셈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우리 민중은 이회창과 같은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행위를 짓부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나라의 자주통일을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영구분열, 대통령 꿈꾸는 역적 이회창

지식인 조명일씨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6일～18일



지금 각계민중들 속에서는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의 반통일적 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특히 한총련의 청년학생들이 반이회창투쟁을 선언한 데 이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민중과 재야시민단체들이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해나서고 있다. 이것은 이회창을 비롯한 극소수반통일세력을 척결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으로 민족자주통일의 새아침을 기어이 안아오려는 우리 민중의 굳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회창은 우리 민중의 통일의지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서 반통일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공동선언의 내용을 제일 먼저 시비해 나선 것이 바로 이회창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더욱 빌붙어 상전에게 추파를 던지며 친미사대매국노로써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미국이 주한미군영구주둔을 떠벌이자 이회창이 남북정상회담직후 곧바로 주한미군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주한미군은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느니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

심지어 이회창은 우리 민중과 전세계가 지지찬양하는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에 명시된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두고 이땅의 안보를 해칠수 있다느니 뭐니하고 떠벌였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이 상호주의를 부르짖으며 대북강경책동에 매달리자 이회창은 한술 더떠서 상호주의, 철저한 검증론, 제도통일론을 부르짖으며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이전의 대결원점으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회창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편승해서 이땅을 미국의 살인무기전시장, 핵전쟁화약고로 만들어 한반도에 제2의 6.25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고 날뛰고 있다.

제반의 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반통일역적이며 희세의 친미사대매국노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회창이 이처럼 영구분열을 꿈꾸며 친미사대매국행위에 날뛰고 있는 저의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한마디로 미국의 환심을 사서 그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자리를 타고앉으려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땅의 실제적 통치자는 바로 미국이다. 이땅을 불법강점한 미국은 대통령을 떼고 붙이는 것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한손에 거머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역대의 한국 대통령들치고 미국의 비호와 지지없이 권좌에 오른 예는 없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것을 대권욕에 눈이 어두운 이회창이 모를 리가 없다. 또 이땅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민족자주통일이 이루어지면 이회창은 대통령은 고사하고 민족반역자, 반통일역적으로써 국민의 심판대위에 올라서야 한다. 때문에 이회창은 어떻게 하나 주한미군영구주둔과 영구분열로 이땅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섬겨바치는 댓가로 대통령자리를 타고 앉아보려고 발광하는 것이다.

이런 친미사대매국노를 어찌 용납할수 있겠는가. 각계애국민중은 이회창의 검은 속셈을 똑바로 보고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터에서, 대학가에서, 성당과 거리에서 아니 온 **천지에서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 올려야 한다. 그리하여 민중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에 빌붙어 분단에 기생하며 대통령꿈을 꾸는 반역아 이회창을 단호히 매장해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에 백해무익한 존재

재야언론인 김진수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6일~18일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를 떠들며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반통일역적집단의 수괴가 바로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재야언론인 김진수씨의 글을 이철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땅에서 우리 민중이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벌여온지도 벌써 50여년이 지났다. 기나긴 세월 그길에서 유명무명의 수많은 애국인사들이 피를 흘렸고 귀중한 생명을 바쳤다. 하지만 겨레의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친미사대매국집단의 민족반역행위와 관련된다. 특히 민족의 외피를 쓴 친미사대매국노들은 우리 민중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을 가차없이 악랄하게 탄압했다. 이와 함께 친미사대주의자들은 우리 민중의 애국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저해해왔다. 오늘도 우리 민족내부에는 그런 매국역적들이 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바로 그 대표적 인물이다.

이회창은 미국에 민족의 자주권을 섬겨 바치려는 자주의 적이다. 주한미군을 대하는 이회창의 작태는 그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은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이땅을 강점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미군야수들은 무고한 우리 민중을 야수적으로 학살했다. 얼마전에도 6.25전쟁을 전후해서 미국침략자들이 2만3,000여명의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6.25전쟁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미군야수들에 의해 목숨을 잃었는가. 미군이야말로 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인두겁을 쓴 야수의 무리이다.

미군은 또 통일의 암적 존재이다. 미군이 이땅을 강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는 애당초 둘로 갈라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군이 우리의 조국통일운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반세기이상이나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이남민중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지 않았을 것이다. 경향각지에서 주한미군철수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회창은 할애비처럼 섬기면서 별의별 추태를 다 부리고 있다. 그는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미군이 한반도평화의 안전판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민중의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무분별한 반미운동으로 모독하고 주한미군철수불가론을 떠들고 있다. 심지어 통일이후에도 미군의 영구주둔을 고창하고 있다. 우리 이남민중의 자주권을 영원히 미군의 군화발에 짓밟히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회창이다. 그가 부시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저들 패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며 분수없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미국의 환심을 사기위해 미사일방어체제를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회창은 통일의 훼방군이다. 그는 정세가 긴장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남북관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질수록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다한다. 하기에 이회창은 날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냉전논리만을 고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더욱 분격을 금할수 없는 것은 지난 군사독재정권시기에 들고나왔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또다시 들고 나오고 있는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은 남북대결구호이고 반통일분열구호이다. 그런데 이회창이 이미 역사의 버림을 받은 낡은 대결보따리를 또다시 펼쳐들고 있는 것은 그가 극악한 반통일미치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회창이 민주민권의 교살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수 있다. 군부독재정권에 기생하면서 자주민주통일운동에 나섰던 수많은 애국인사들을 파쇼악법에 걸어 무자비하게 처형한 공로로 승진을 거듭한 이회창은 애당초 민주민권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파쇼분자이다. 하기에 지금 그는 노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진정한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단체들의 순수한 시민운동을 누구의 홍위병으로 모독하며 이땅을 지난 군부독재시기와 같은 파쇼의 난무장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8.15광복절을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남북대결의 빌미로 악용하면서 한국판 매카시즘소동을 일으킨 것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이회창이야말로 자주민주통일에 백해무익한 존재이다. 더욱이 이런 민족, 민중의 극악한 원수가 차기대권을 노리고 활개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수치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대권욕에 환장해 나라와 민족을 외국의 제물로 섬겨바치려는 이회창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에 너도 나도 동참해야 한다.

네, 민중이 바라고 민족이 바라는 모든 걸 한사코 방해하고 있는 이회창역적은 백해무익한 걸림돌이라고 하겠는데요. 걸림돌은 제때에 뽑아버려야 하는거죠.

대쪽이냐 잡덩굴이냐

재야언론인 이동수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2일~15일



일반적으로 대쪽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참대처럼 대가 바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을 뜻한다. 이를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의 한몸을 내댈수 있는 사람, 정의를 위해서는 단두대에도 서슴없이 나설수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을 그의 하수인들이 내돌리고 있는 것처럼 대쪽같은 사람이라 볼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회창은 어릴때부터 친일주구의 가정에서 자라 호위호식하면서 일신의 부귀영화와 출세만을 꿈꾸어온 사람이다. 대학교시절 그 꿈이 너무 허망해 동창들의 비난이 컸다.

더욱이 57년 6월부터 시작된 30여년간의 법관생활과정에 이회창의 매국배족적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나 그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침을 뱉었다. 그것은 이 기간 그가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파쇼통치를 유지, 연장하는데 발벗고 나섰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한 애국민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 광분했기 때문이다.

82년 3월에 있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 15명에게 극형과 중형을 언도한 것도 바로 당시 대법원판사로 있던 이회창이였다. 이회창은 오직 반민족반민주파쇼악법의 유지와 그 실천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민족과 민중을 위한 대가 아니라 외세와 매국파쇼집단을 위해 이른바 대를 키운 것이다.

이회창의 반역적 정체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를 전후해 더욱 뚜렷이 표현됐다. 애당초 그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에 대해 북에 가야 얻을 것이 없다느니 뭐니하며 반대했다. 이런 이회창이기에 그는 민족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제일먼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 조항조항을 꼬집어 시비, 반대했다.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접촉이 진행되자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넘어간다느니 북에 퍼만 준다느니 북에 끌려만 다닌다느니 하면서 그에 제동을 건 것도,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의 길을 가로막아 나선 것도 이회창이다.

어찌 그뿐이랴. 그는 주한미군철수와 양민학살진상규명, 일본의 역사왜곡책동반대 등의 구호밑에 벌이는 우리 민중의 반미반일투쟁을 한미한일관계에 손상을 준다며 극구 반대했다. 오죽하면 국민들속에서 이회창의 정치소속이 불투명하다는 비난까지 대거 쏟아져 나왔겠는가.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적 정체는 미국에서 부시정부가 출범하자 그에 아부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적극 편승해 나서고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미국상전의 지지를 받아 차기 대권을 장악하려고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회창의 심복들은 그가 마치 청렴결백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돌리지만 이 역시 궤변이다. 이회창은 법관생활을 하던 때로부터 한나라당총재로 있는 지금까지 장구한 기간 각종 잇권에 개입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정착복했고 근 1조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끌어모았다. 세풍사건에 관여해 거액을 먹은 것도 96년 4.11총선때에 ≪안기부자금횡령사건≫에 개입해 거액을 부정착복한 것도 이회창이다.

법의 어두운 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전문가이기에 그는 거액을 먹어도 잘 드러나지 않게 아주 교묘하게 먹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회창을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역사를 거스르고 민족을 반역하는 이회창이야말로 대쪽이 아니라 잡덩굴이다. 잡덩굴은 제때에 불태워버려야 한다.

≪이회창은 정계에서 퇴출시키자≫ 이 구호야말로 오늘 한국에서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해 절실히 요청되는 구호이다. 각계 민중은 이회창을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네, 이회창에게 대쪽이란 건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거죠. 이회창은 대쪽이 아니라 벌써 뿌리채 뽑아 말리워버렸어야 할 독초와 같은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이회창같은 자가 아직도 정계에 있다는 건 우리 민중의 수치라고 할겁니다.

거리로 나선 ≪이회창 정치활동 감시단≫

≪토요정치마당≫ 매주 열어…젊은층, 호응 커



대학가에 반이회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한총련은 ≪이회창 정치활동 감시단≫을 발족시켰고, ≪반이회창가≫라는 노래까지 등장했다. 이런 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시내 도심에서 ≪이회창 총재님 이의 있습니다≫라는 기치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17일) 종로 YMCA앞에서 진행된 ≪토요정치마당≫에는 한총련 이회창 정치활동 감시단, 고려대 반민족행위단죄투쟁위원회, 서울대 남북공동선언 실현 운동본부, 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등 청년단체들과 통일연대 소속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1월 3일 첫 행사를 가진 ≪토요정치마당≫은 오늘로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유림양(서울대 기초과학계 00학번)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직 저희들의 이야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내용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 드리면 수긍해주시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라며 시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김양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사회 변화 가능성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다.

옆에서 ≪이회창을 반대한다≫라는 판을 들고 서 있는 김정규(경기대 경영학과 96학번)군은 ≪이회창 총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키고 있다≫며 ≪민족모두의 염원인 통일에 대해서 딴지거는 모습이 너무 심하다≫며 이회창 총재의 통일관에 대한 비판했다.

한편 시민들을 향해 정치연설을 막 마치고 난 서총련 산하 서부총련 의장인 이경민(경기대 총학생회장 경영학과 98학번)군은 ≪이회창 총재 반대 운동을 관념적인 반대구호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취하고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즉 이회창 총재의 교육관, 통일관, 민중생존권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시민들을 만나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다≫며 이회창 반대운동의 방향을 이야기한다.

그는 또 ≪내년 대선에서는 이회창을 대통령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모임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 뿐 아니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시위에는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이 단골 시위현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벌어진 전교조의 ≪교육≫집회, 전농의 ≪쌀≫시위 모두 집권여당 뿐 아니라 야당인 한나라당으로 화살을 맞추었다.

이에 대해 집회를 지켜본 김성호(33세, 회사원)씨는 ≪개혁입법에 대한 발목잡기, 여당의 통일정책에 대한 딴지걸기등의 행태가 야당에 대한 비난과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했지만, 2-30대 층의 기권에 의한 결과였다. 20-30대가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한나라당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용득 기자 2001년 11월 17일

이회창총재 광주방문에 남총련 학생들 ≪발끈≫

한나라당 앞에서 ≪이총재 정계 떠나라≫ 시위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호남민심 잡기≫를 위해 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차 광주를 방문했으나,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이총재는 정계를 떠나라≫며 거센 반대시위를 벌였다.

오늘(20일) 함평.영광지구당과 광주 동구지구당 임시대회에 참석한 이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라는 발언으로 호남민심을 얻으려 했으나 여전히 광주는 이총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전남대, 조선대 등 이지역 대학생 150여명은 이총재의 광주방문에 맞춰 시내에서 ≪기습 시위≫를 펼치고 한나라당 동구지구당 앞으로 몰려가 ≪친미적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를 망치는 이총재는 정계를 떠나라≫며 한라당과 이총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앞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한 학생들은 경찰과 1시간여동안 대치했다.

광주전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은 이총재의 광주방문을 계기로 이번주를 ≪이총재 학점매기기≫주간으로 설정, 대학내는 물론 시민들을 상대로 ≪반이회창≫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총재는 차기 대선에 당선된다면 ≪정치보복은 없다≫며 화합.통합을 통한 전국정당을 강조하고 ≪ 단 1명이라도 이회창 이름 밑에 동그라미를 치는 분이 있는 한 우리당은 호남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진 기자 2001년 11월 20일



≪전쟁을 반대하는 자는 테러 옹호자다(?)≫

민언련, ≪세계평화와 조선일보≫ 주제 토론회 개최



조선일보의 보도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민언련은 15일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세계평화와 조선일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언론개혁에 대한 조선일보의 여론호도 행태와 조선일보의 반인권, 반노동, 반교육개혁적 보도에 이은 두 번째 조선일보 해부인 셈이다.

미 테러사건 · 보복전쟁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분쟁과 TMD · NMD, 남북관계 등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조선일보의 문제를 3시간 가량 토론했다.

테러 · 전쟁과 조선일보 주제로 주 발제를 맡은 김은주(민언련 신문모니터) 위원장은 9.11테러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조목조목 따지며 모니터를 하면 할수록 조선일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고 먼저 운을 뗐다.

김위원장은 이번 9.11테러와 관련해 조선일보 보도양태를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

미 강경파 입장에 충실한 반면 난민피해는 외면하는 등 미국의 시각으로 보도하면서 전쟁을 부추겼다는 분석을 했다. 최근 생화학 무기공격이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공포를 이용, 북의 생화학무기사용 가능성도 언급해 한반도에 공포분위기를 조장했다는 비난도 있었다.

조선일보가 이번 테러 · 전쟁보도에서 특히나 문제시되는 것은 테러지원국으로서 북한을 이번 사건과 연루시킨 점이다. 여기에 더불어 빈라덴과 북한이 연계돼 있다는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몰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반전평화움직임을 단순한 반미로만 치부해버리면서 보복전쟁을 반대하는 주장을 테러지지주장으로 호도하는 등 노골적 내용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 · 통일과 조선일보라는 주제로 보조발제에 나선 김이경(통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남북공동행사 때 평양방문을 하면서 행사 개최장소에 따른 신중하지 못한 언론보도에 안타까웠다≫고 전하며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 극복에 언론의 역할이 클 것이다≫며 조선일보 구독거부에 이어 폐간운동도 서슴치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MD보도에서 나서는 일간지의 전반적인 보도행태는 전문성 부재다≫고 꼬집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미사일문제에 있어 전문적이지 못하면서 한반도에 나서는 본질적인 문제 접근을 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해방전후부터 시작된 조선일보의 대미관을 꼬집은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은 ≪오늘날 일등신문 조선일보의 언론권력은 상업성이라고 얘기되지만 사실은 미국과 권력에 지향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의 미테러 · 전쟁에 관한 보도행태는 미디어비평에서도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다.

10월 13일자 미디어비평에서는 지난 91년 걸프전 자료화면과 각종 무기실험 때 사용한 자료들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과 전쟁을 오락용으로 전락시켜 버린 보도행태, 희생자보다는 미국입장만을 지나치게 보도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백영순 기자 2001년 11월 1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성명

-8.15 민족통일대축전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90년 11월 20일 베를린에서 남북해외 3자가 모여 범민련을 결성하기로 합의한 지 11년이 지났다. 범민련 전 성원은 범민련 결성 11돌을 맞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기치 아래 싸워 왔던 지난 날을 긍지 높이 돌아 보며 향후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과정 또한 선두에서 싸울 결의와 각오에 넘쳐 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북남)의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평양에서 만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1년 반이 되어 간다. 평양에서의 만남과 6.15 선언은 반목과 대결로 점철되어 온 과거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낸 민족사에 빛날 대사변이었다. 이로부터 7천만 민족의 연대와 단합은 날을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 조국통일 운동은 민족자주의 원칙하에 확고히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일 외세의 노골적인 내정 간섭과 이에 추종하는 수구보수세력의 준동은 6.15 공동선언의 온전한 이행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9.11 참사를 빌미로 때아닌 긴장 고조, 군비 증강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 책동이 위험 계선을 넘어 서고 있다.

6.15 공동선언은 민족 자주.평화.대단결 선언이다. 6.15 공동선언과 외세 추종노선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의 그 어디에 민족의 대결과 분열을 부추기는 문구가 들어 있는가?

범민련은 외세와 수구보수세력에 의한 반통일책동이 심각한 상황에 접어 든 지금,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 전민족적인 공동투쟁에 떨쳐 나설 것을 7천만 민족 앞에 엄숙히 호소한다.

지난 8.15에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각계각층의 만남과 연대를 실현한 축제와 단합의 장이었다. 그럼에도 공안당국은 사전회합, 잠입탈출이니, 고무 찬양이니 하는 사멸해 가는 국가보안법의 낡은 잣대를 들이대어 사법 처리하고 말았다. 국가보안법이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더더구나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될 수는 없다. 범민련은 금번 평양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 및 강정구 교수에 대한 공판 놀음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6.15의 약속은 통일조국을 열어 젖힐 이정표이며 7천만 민족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등대이다.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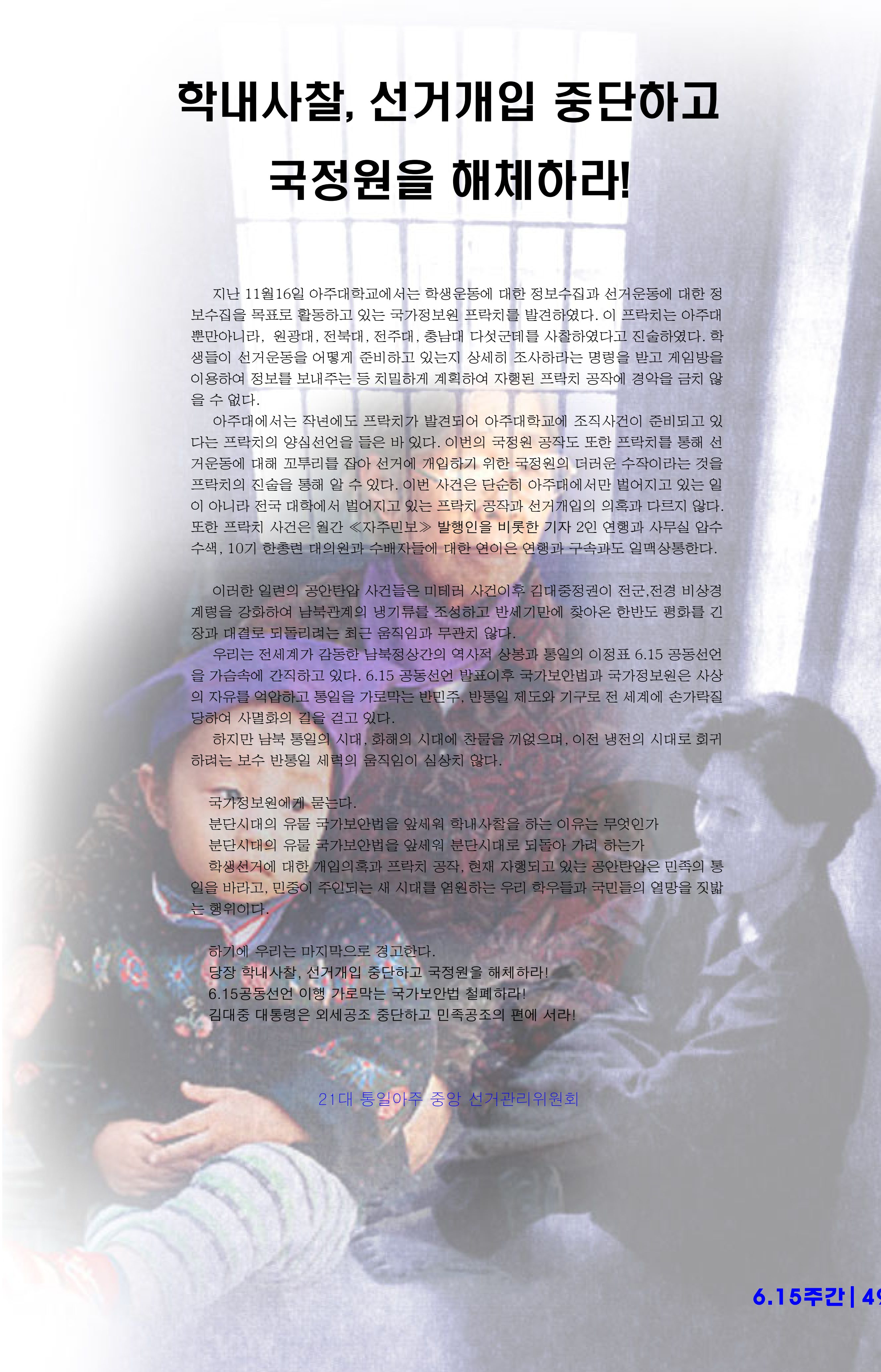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만세!!!

6.15 공동선언 만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만세!!!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11월 2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 평양, 도쿄

학내사찰, 선거개입 중단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지난 11월16일 아주대학교에서는 학생운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선거운동에 대한 정보수집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프락치를 발견하였다. 이 프락치는 아주대뿐만아니라,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충남대 다섯군데를 사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히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게임방을 이용하여 정보를 보내주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자행된 프락치 공작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아주대에서는 작년에도 프락치가 발견되어 아주대학교에 조직사건이 준비되고 있다는 프락치의 양심선언을 들은 바 있다. 이번의 국정원 공작도 또한 프락치를 통해 선거운동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국정원의 더러운 수작이라는 것을 프락치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아주대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락치 공작과 선거개입의 의혹과 다르지 않다. 또한 프락치 사건은 월간 ≪자주민보≫ 발행인을 비롯한 기자 2인 연행과 사무실 압수수색, 10기 한총련 대의원과 수배자들에 대한 연이은 연행과 구속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일련의 공안탄압 사건들은 미테러 사건이후 김대중정권이 전군,전경 비상경계령을 강화하여 남북관계의 냉기류를 조성하고 반세기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를 긴장과 대결로 되돌리려는 최근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우리는 전세계가 감동한 남북정상간의 역사적 상봉과 통일의 이정표 6.15 공동선언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발표이후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통일 제도와 기구로 전 세계에 손가락질 당하여 사멸화의 길을 걷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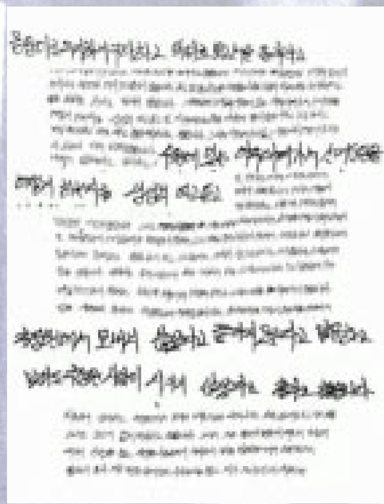
하지만 남북 통일의 시대, 화해의 시대에 찬물을 끼얹으며, 이전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보수 반통일 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가정보원에게 묻는다.
분단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학내사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단시대의 유물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분단시대로 되돌아 가려 하는가
학생선거에 대한 개입의혹과 프락치 공작,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안탄압은 민족의 통일을 바라고, 민중이 주인되는 새 시대를 염원하는 우리 학우들과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이다.

하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당장 학내사찰, 선거개입 중단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6.15공동선언 이행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외세공조 중단하고 민족공조의 편에 서라!

21대 통일아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원, 프락치 통한 학원사찰 의혹…
아주대등 5곳



지난 16일 새벽 2시경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학생회관 2 · 3층을 기웃거리던 프락치를 목격, 이를 수상히 여긴 끝에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프락치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프락치로 밝혀진 손현록(77년생, 전북)군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손군으로 하여금 메일을 통해 아주대뿐만 아니라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충남대 등 5군데를 사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각 학교마다의 총학생회 선거동향을 파악, 이를 보고토록 해 왔던 것이다.

또한 손군은 정보 제공의 댓가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왔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국정원 인사들로 부터 고문과 구타를 당해 온 것으로 밝혔다.

소년원 출신으로 96년 군제대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고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중 국정원의 제안으로 프락치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손군은 평소 할머니 병원까지 찾아와 위협하고 구타하는 반인륜적인 행각을 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손군이 쓴 진술서는 이러한 내용이 빼곡이 적혀있다. 다음은 진술서의 일부다 .

(전략) ...

PC방에서 2일동안 있으면서 국정원들의 명령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거기 가기 싫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내려와서 니가 지금까지 준 돈을 PC 게임비로 많이 나가고 또 국정원이 PC방 화장실에서 구타를 맞았습니다. 4명에서 돌아가면서 발로 얼굴과 등을 맞는데, 처음에는 죽어버릴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 똑바로 못하겠냐고 또 죽고싶냐고 저에게 협박까지 하면서 죽기싫으면 똑바로 보고서 올리고 이런 보고서 아주 생생히 한방에 보낼수 있는 보고서를 해달라고 안그러면 신상이 안좋을거라고 하면서 협박두 하면서… (후략)

※ 참고: 손군의 자필 글이라 비문은 따로 수정하지 않음

진술서에 따르면 손군은 국정원의 연락이 올때까지 무작정 PC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몇일동안이나 기다려야 했고 메일을 통해 어디있는지를 밝히면 그곳으로 국정원에서 찾아온다고 한다.

그러한 방법으로 5곳의 학원을 사찰하였고 이번 아주대에서도 명령을 기다리다 연락이 없자, 무작정 새벽에 총학생회실을 감시하려다 붙잡힌 것이다.

앞선 진술서에서 확인되었듯 국정원은 손군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한방에 보낼수 있는≫ 보고서를 요구했었고 거부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때마다 가차없이 구타까지 자행하면서 프락치 역할을 강제해왔었다.

아주대 총학생회는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학내사찰, 선거개입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 공작도 프락치를 통해 선거운동에 대해 꼬투리를 잡아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국정원의 수작이라는 것을 프락치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아주대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락치 공작과 선거개입의 의혹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주대에서는 지난해에도 프락치가 발견된바 있다.

최범수 기자 2001년 11월 21일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위반 연행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1999년 14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세계 최연소 장기수≫ 강용주(40 · 전남대 의대 본과 2년)씨가 19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연행됐다.

전남경찰청 화순경찰서는 이날 아침 7시께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강씨를 전격 연행했다.

광주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복역하고 출소할 경우 주거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강씨는 그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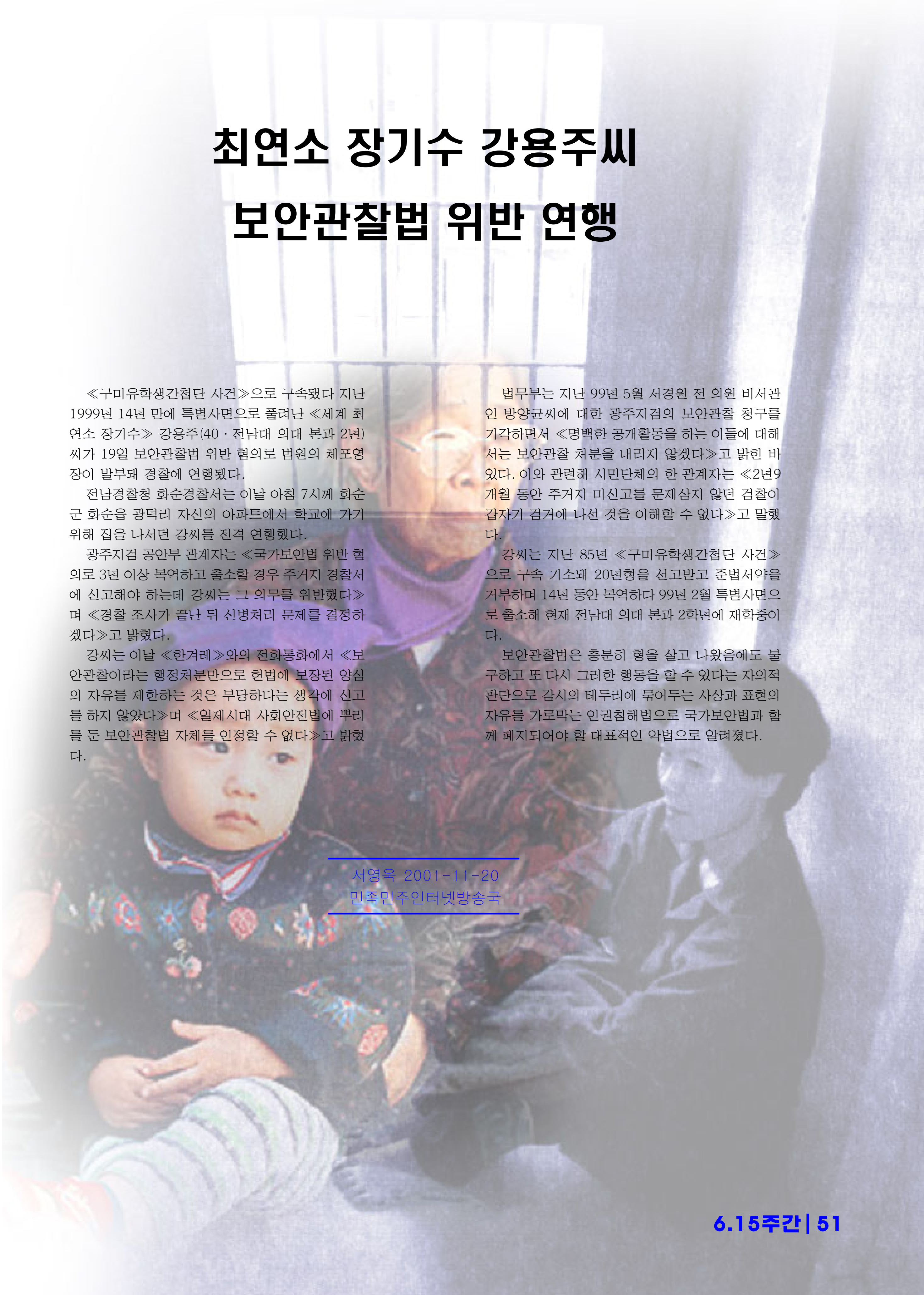
강씨는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안관찰이라는 행정처분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일제시대 사회안전법에 뿌리를 둔 보안관찰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9년 5월 서경원 전 의원 비서관인 방양균씨에 대한 광주지검의 보안관찰 청구를 기각하면서 ≪명백한 공개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2년9개월 동안 주거지 미신고를 문제삼지 않던 검찰이 갑자기 검거에 나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0년형을 선고받고 준법서약을 거부하며 14년 동안 복역하다 99년 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현재 전남대 의대 본과 2학년에 재학중이다.

보안관찰법은 충분히 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감시의 테두리에 묶어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인권침해법으로 국가보안법과 함께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법으로 알려졌다.

서영욱 2001-11-20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거리에 나선 양심들≫

6.15선언이행과 국보법폐지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캠페인



≪통일연대 구속자 석방 대책위원회(대책위)≫를 비롯한 11개의 국가보안법(국보법) 관련 구속자 석방 대책위가 시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대책위들은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종로 YMCA 앞에서 ≪6.15공동선언이행과 국가보안법폐지 및 양심수석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해 오늘(17일)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대책위들은 ≪거리 캠페인≫에서 국보법 폐지 관련 홍보물 배포와 전시, 서명운동, 모금활동 등을 펼치면서 시민들을 만났다.

이날 캠페인에는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서명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숭곡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닌다는 김다운, 윤은미, 김민정 어린이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통일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석방을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들 어린이들은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며 무서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구속자들이 ≪불쌍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또한 주변에서 거리 캠페인을 지켜보던 권오성(30세, 중곡동)씨도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 적용시 자기들 잣대로 맘대로 적용하는 것≫이라며 ≪정권 유지 차원에서 악용되는 것≫ 등의 예를 들면서 ≪가능하면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국대 사건 대책위의 주관으로 진행된 오늘 캠페인은 최창우(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와 단국대 학생들이 나서서 반드시 국보법 폐지를 이뤄내자는 호소의 말을 했다.

또한 단국대 활동과 관련해 구속되기도 했던 구본승(단국대 민주동문회) 간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같이 구속됐던 후배 정찬무(단국대96), 황우정(단국대, 96)씨가 아직도 구속상태이기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그 참여동기를 밝혔다.

구본승 간사는 ≪남북장관급 회담이 결렬돼 남북관계가 경색되긴 했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국보법 폐지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본승 간사는 ≪지난 3차 캠페인 때는 1시간 동안 5만원 정도의 모금액이 모였다≫며 ≪이것만 봐도 국보법 폐지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열리고 있는 신상옥 감독 회고전 가운데 ≪탈출기≫가 국보법상 이적 표현물에 해당돼 일반 상영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해 다시 한번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국보법은 6.15공동선언으로 그 존립 근거를 잃은 지 오래라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1-17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싶다≫

경상대 ≪한총련≫ 관련 7명 수배, 최근 모임 결성 후 각종 활동


정치 수배자를 가족의 품으로…

진주 경상대에서 현재 단과대학 등 학생회 활동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수배자는 7명이다. 최근 이들이 ≪경상대 정치 수배자 모임≫을 결성하고, 대학 도서관 앞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가지면서 ≪정치 수배 해제≫와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동진(99년 총학생회장), 이호종(2001년 인문대 학생회장), 정철균(2000년 인문대 학생회장), 정준(2001년 사회대 학생회장), 김홍기(2000년 사범대 학생회장), 박윤석(2000년 사회대 학생회장), 김세영(2001년 법대 학생회장) 군이 그들이다. 이동진, 박윤석 군은 학내 문제와 관련해 제적된 상태다.

이동진 군은 3년째, 나머지 학생들은 1년 내지 2년째 수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모임을 결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동안 수배자 신분이어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경상대 도서관 앞에서 금요마당을 열고 있다. 이들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해 각종 먹을거리를 판매하면서 홍보전단을 나눠주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했으며, 엽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항의문구를 담은 엽서를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요마당≫은 그 동안 다섯 차례 열었는데,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한다.

≪정치수배≫ 학생들은 당국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불법단체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한 수배 학생의 설명이다.

≪당국은 한총련을 ≪폭력시위≫를 벌이고 북한의 통일 방안인 연방제안을 택하고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적성이 있다며 불법단체로 규정했고, 탈퇴하지 않은 학생을 수배를 내려 놓고 있다. 하지만 97년 한총련 결성 이후 한총련 이름으로 폭력시위를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올해 8 · 15 광복절 남북공동행사가 평양에 열렸을 때 한총련 대표가 참가하기도 했다.≫

3년째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동진 씨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낮에는 학생들과 함께 지내기에 어려움을 모르겠다. 그런데 밤이 되고, 특히 명절 때는 너무나 힘들다. 간혹 친구나 후배들이 먹을거리를 사들고 밤에 찾아오면 더 없이 기쁘다. 명절 때 후배들이 양말 한 켤레라도 포장해서 선물로 주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다.≫

어려운 생활을 청산하고 자수하거나 한총련을 탈퇴하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동진 씨는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양심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더구나 정부에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데, 자수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역사발전을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수배 학생들은 일기를 쓰고 있다.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정신을 다잡기도 한다. 다음은 정준 군이 쓴 일기의 한 대목이다. 수배 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중요 대목만 옮겨 본다.

≪오늘도 무사하다는 생각에 눈을 떴다. 연일 다른 대학 대의원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에 밤만 되면 불안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수배생활 3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때로 되었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요즘 들어 부쩍 집 생각이 많이 난다. 며칠 전 내 생일날 아침에 집에서 생일 밥이랑 미역국을 보내왔다. 참으로 부모님께 죄송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이 먹고 싶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이….≫(10월 17일).

≪오늘은 감기 몸살로 하루종일 누워 있었다. 집 밖에서 아프면 서럽다는 말이 있지만 서럽지는 않다.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많다. 특히 명진이는 며칠 전 밤에 잘 때 추울까봐 전기 장판도 사왔다. 그리고 오늘은 아프다니까 어디서 구해왔는지 한약을 구해왔다. 하지만 나는 고마운 표시를 하지 못했다. 하루종일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다.≫(10월 18일).

윤성효 기자 cjnews@thrunet.com

≪통 큰 단결≫ 큰 밑그림
≪양대선거 도약 열쇠는 연대≫

재보선 저조한 득표계기로 공감대 확산, 민노당.민주노총.전국연합등 활발한 운직임

진보정당과 각계 진보세력들이 ≪단결≫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력 결집이 시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기대에 못미쳤던 10 · 25 재 · 보선 결과가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안세력의 이미지를 심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 진보진영 결집 움직임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국연합은 지난 14일 ≪진보정당과 2002년 양대 선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엔 노동운동의 또다른 축인 한국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한총련, 자치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위한 1차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전국연합은 재야운동에서 방향을 틀어 올해 하반기들어 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 등 전국 지역조직의 3분의 2 가량이 민노당에 합류했다. 한국노총은 2004년 총선으로 잡았던 독자 정치세력화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개혁적인 지방정치인 모임인 자치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선거에서 진보세력의 연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영길 민노당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내년 양대 선거에 모든 진보세력이 결집할 수 있도록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재창당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당명과 지도체제를 바꿔서라도 연대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재 · 보선 평가와 반성 = 이런 ≪거듭나기≫ 모색은 10 · 25 재 · 보선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 동대문을에서 민노당 2.91%, 사회당 1.81%, 구로을에서 민노당 2.61%, 사회당 2.68%에 그쳤던 득표율은 지난해 4 · 13 총선에서 민노당이 얻은 평균 13.1%에 비하면 형편없는 결과였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염증으로 과반수 유권자가 지지 정당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평소 여론조사 때의 ≪진보정당 고정표≫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다.

이상현 민노당 대변인은 창당 이후 지지율이 5%까지 오르다가 정체되고 있다며 지역주의와 보수주의의 만연이라는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대안 정치세력으로서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내년 선거는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치러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확장된 세력권을 형성해야만 의미있는 득표가 가능하다는 게 민노당의 판단인 것이다.

정대연 전국연합 정책위원장도 특정계급을 대변하거나 소수 정파라는 이미지로는 유권자의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며 진보진영의 후보가 나뉘어 나가는 것은 치명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 양대 선거 전망 =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이런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치연대 공동대표인 김두관 남해군수는 진보세력이 전국적인 연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변화와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광역의회와 기초단체장에 진출해있는 자치연대와 지난 지방선거에서 38명을 당선시킨 환경운동연합, 양대 노총, 농민단체 등이 연대하면, 전체 지방의원 지역구의 절반에 가까운 2천여곳에 공동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계산이다. 더구나 내년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1인2표 비례대표제 실시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통합된 정당 형태로 공천이 이뤄진다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비해 대통령 선거 참여 방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독자 후보를 낼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성 정치권에서 보수색을 띤 후보들만 나올 경우 내년 대선은 진보정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데 이견이 없다. 반면 개혁신당 출현이나 개혁성향 후보의 출마는 이들의 대선전략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에도 여야 보수정당과 모두 차별화하는 ≪3파전 구도≫를 통해 100만표 이상을 얻어 제3의 대안세력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2004년 총선에서 5명 이상의 원내진출, 2008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룬다는 게 민노당의 큰 그림이다.

이제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된 셈이다. 극우에서 개혁까지 끌어담는 기성정당의 ≪과욕≫과는 반대로 지나치게 협소했던 진보정당의 틀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용현 기자 piao@hani.co.kr
한겨레11월 19일

반통일악법 완전 철폐돼야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6일~18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평양에서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 북,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모여서 8.15통일대행사를 치뤘는데요. 그런데 이남의 공안당국은 통일행사에 참가했던 일부 인사들을 국보법위반이라는 죄에 걸어 구속했습니다. 지금 각계민중들은 국보법을 그냥 두곤 통일도 아무것도 될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 전면철폐투쟁을 더욱 세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규씨 모시고 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이땅의 각계민중들 속에서는 희세의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각계민중들 속에서는 동족인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하는 보안법을 전면철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도높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천의 한 종교인은 어느 한 종교행사에서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공포한 이상 북을 반국가단체로, 동족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존재명분을 상실했고 따라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민가협 공동의장은 한겨레신문에 낸 글에서 보안법은 제정될때부터 민중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성때문에 거센 반대여론이 일어난 악법으로써 반드시 철폐돼야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회자 :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학계에서도 강력히 울려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얼마전 외국어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남에서 보안법으로해서 많은 정치범들이 생겨나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결국 진짜 냉전을 가져온 것은 국가보안법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확대간부수련회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거 민주와 통일을 막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구속해왔던 보안법은 대표적인 구시대적 유물임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보안법은 남북정상회담이후에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그 존재근거를 잃은지 오래다.≫

성명은 이같이 밝히면서 보안법의 전면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회자 : 이같은 주장은 각계단체들과 단체회원들 속에서도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얼마전 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역대정권이 보안법을 내세워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요구와 사회개혁요구를 불순한 음모로 몰아붙였다면서 반민중적 악법인 보안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총련소속 대학생들과 국민연대 회원 등 600여명은 보안법완전철폐를 요구해 명동성당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치권의 다툼으로 보안법개정안조차 국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전면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자 : 최근 도서출판 ≪자주민보≫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월간 ≪자주민보≫발행인 등 구속언론인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결성식을 갖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네, 그랬죠. 공대위는 이날 결성식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주민보≫ 언론인들을 구속한 것은 합법적 언론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지난 10월 25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자주민보≫ 이창기발행인 및 전현직기자 등 3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회자 : 그에 앞서 ≪자주민보≫**는** 국정원의 이같은 폭거를 반통일보수세력들의 민족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명은 잡지 ≪자주민보≫가 창간후 1년 6개월동안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언론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고 하면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자주민보≫를 탄압한 건 명백히 공동선언파기행위이며 반민족, 반통일행위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김현규 : 그러면서 성명은 만일 이북의 긍정적인 면, 민족적인 면을 글에 담는 것이 불법이고 보안법위반이라면 매문지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들이 모두 감옥신세를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자 : 정말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우리 민중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법적장치인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희세의 반민족, 반통일악법이라는 것이 더욱 극명해집니다. 우리 민중은 국가보안법을 그냥 두고서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할수 없고 나아가서는 통일을 이룰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완전철폐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네, 감사합니다.

조미관계악화의 장본인은 미국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2일~15일

최근 조미관계를 보면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클린턴행정부시기에 조미간에는 관계개선의 조짐이 여러 갈래로 있었고 또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부시행정부가 들어앉은 후 조미관계가 급속히 악화됐고 그것이 좋게 진전되던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조미관계가 이처럼 악화되게 됐는지 오일씨 말씀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적대관계로 얼어붙었던 조미관계가 좋게 발전하는가 했더니 오늘에 와서는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연히 남북간의 정치정세에도 영향을 미쳐 남북관계도 소원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 국민각계의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미관계가 왜 이렇게 호전되지 않고 악화됐느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그 장본인은 누구냐 그 소재를 따져볼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10월 18일 부시미국대통령은 아펙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치 미국이 조미대화를 바라고 있는데 북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는가 하면 심지어는 북의 최고지도부에 대해 의심스럽다느니 약속을 이행하기를 거부한다느니 이해할수 없다느니 뭐니하고 갖은 험담을 늘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기자회견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고 할 소리냐, 그래도 일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무능하고 저질일수야 있느냐, 진심으로 조미관계개선을 바라는 사람이 할 소리냐 이렇게들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다 보아온 것이지만 부시행정부는 세상에 마각을 드러내자마자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북을 걸고들며 북조선 지도자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고 의심보따리를 먼저 풀어놓은 것도 부시이고 한창 진행중에 있던 조미대화를 중단시킨 장본인도 부시행정부입니다. 조미사이에 채택된 기본합의문과 공동코뮤니케이행에 차단봉을 내린 것도 부시정부라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고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미관계악화의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 것이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부시행정부의 출현으로 좋게 발전하던 조미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되돌아보면 조미관계역사는 뿌리깊은 적대적 관계의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클린턴정권에 이르러 조미관계에서는 눈녹이가 다소 시작됐습니다. 조미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가 추진되고 적대관계를 해소할 것을 확약한 공동코뮤니케, 테러를 반대하는 공동성명도 나왔고 조미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의 특사방문과 친서교환이 있었는가 하면 최고위급방문문제가 일정에 올랐습니다. 특히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북일정에는 미국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북의 미사일문제를 쌍방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려는 북의 중대결단에 대해 토의하는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미관계는 정상화의 궤도로 점차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미국에서 새 행정부로 출현한 부시정권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엎었습니다. 세계제패를 위한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우선시한 새 행정부로서는 북의 미사일문제를 조기해결하는 것이 불편스러웠으며 오히려 불량배국가라는 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부시정부가 지난 2월에 내놓은 조미대화재개제안 역시 본질에 있어서 북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강도적 논리에 지나지 않으며 조미대화자체가 성사되지 못하게 하려는 술책이라고 밖에 달리는 풀이할수 없습니다. 저들은 한국의 곳곳에 근 4만명의 병력과 1천여개의 핵무기 그리고 최신예 군사장비들을 배치해 놓고 오히려 북을 보고 상용무기까지 철수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하자면 북에 대해 생트집을 걸고 압력을 가하다못해 바지까지 벗으라는 날강도소리를 하니 북이 왜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프간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이 놀아난 꼴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공격작전에 의한 이른바 전력공백을 구실로 주한미군전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비상경계소동을 벌인 것도, 북에 대한 군사적 압력과 전쟁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책동으로써 그들의 대북강경압살정책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뚜렷한 실증을 줍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완화와 화해의 분위기속에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북사이에 계획됐던 이산가족들의 교환방문이 부득이하게 일시 연기되는 등 완화분위기를 냉각상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조미관계의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시정권에 있습니다. 부시가 저들의 범죄적 책동은 덩반위에 올려놓고 북을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소리를, 심지어는 북을 자극하는 불순한 악담을 마구 늘어놓는 것은 정치망나니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해도 외교정책에서는 계승성과 일관성이 어느 정도 보존되는 것이 상식인데 부시정부에 와서 그렇게 안되는 것이 의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시정부는 북을 압살하기 위한 대북적대시정책을 그만두고 내외의 일치한 요구대로 조미관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중은 미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미관계악화의 장본인은 미국≫이라는 얘기였는데요. 미국은 입이 열개라도 조미관계악화의 책임문제에 대해 횡설수설할수 없다고 할겁니다. 조미관계개선은 미국의 부시행정부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이 진정 조미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미국이 태도를 바꿔야합니다.

민족의 생존을 패권국가의 제단에 바치려는가

재미언론인 김민웅씨의 글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1월 16일~18일

이회창의 대미인식과 민족관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우리 문제를 우리 민족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견해를 우선시하여 사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알수 없을 지경이다.

이회창은 자기와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인식이 일치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을 펴고 있다. 사대주의자라는 규정을 달가와할 정치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회창과 같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민족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그의 한계만이 아니라 야당이 재현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의 한계이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외교적 자주성이 노골적으로 침해당하는 사태를 겪었다. 러시아와의 외교적 협약도 미국의 한마디에 뒤집어야 했으며 정상회담도 자주국가의 격에 맞는 예의와 분위기가 결코 아니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필두로 많은 국내언론들과 야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이회창은 미국의 이러한 패권적 내정간섭을 비판과 항의의 도마위에 올려놓기보다는 미국의 비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외교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그 책임을 김대중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이들 일부 수구언론들과 야당 그리고 이회창은 한미정상회담이후 자기들의 견해를 정리했다. 즉 한미간의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한미공조가 안보의 기초인데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안보위기를 초래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잘못된 견해이다. 한미정상회담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한미간 견해차이에 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의 차기정권이 남북화해와 협력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이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에 중대한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가 미국의 견해에 맞추어야 한다는 식으로 몰고가는 것도 문제다. 더군다나 누구의 책임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삐걱거렸는지 그 책임소재와 원인분석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잘되어가려던 남북관계를 군사주의적 패권전략으로 방해하려는 미국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할 의사가 없으며 냉전의 토대위에서 자기들의 새로운 군사주의노선을 강경하게 관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런데도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자기들의 정책과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이 일치하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는 김대중정권의 대북화해정책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남북문제를 민족적 관점에서 풀려는 의지도 없고 또 그러한 안목도 없는 정치인과 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회창은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적대군사주의노선에 영합해 이른바 상호주의 및 검증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결국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방해를 놓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회창은 한참 무르익어 가려는 남북관계의 화해분위기를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내가 손해냐, 네가 이익이냐하는 시정잡배의 속좁은 계산은 접어두고 미래를 위한 공동의 반석을 다져야할 때이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전략적 상호주의와 검증론을 내세우는 속셈은 무엇인가. 혹시 미국에 빌붙어 차기권력을 얻어볼 생각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은 지금 북에 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하고 을러대고 있다. 그렇게 벗기고 벗겨서 집 안방에까지 들어가겠다는 것을 이회창이 모르고 있단 말인가. 정말 그렇다면 국제정세의 인식은 우화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북에 대한 경제지원이 한국경제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무기강매에 들어가는 돈이 과연 얼마인지 그래서 군사비부담이 국민들의 미래를 어떻게 **를 시키고 있는지 제대로 짚어내지도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있어 분단해결은 난망이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민족적 혈통과는 관련이 없는 국제관계에서나 통할 상호주의를 역설하면서 우리 나름의 민족주의적 방식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아 나섰다. 그리고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사전에 승인받으라고 요구했다. 말로는 남북대화의 한국정부의 주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전검열을 받으라는 것이다. 미국은 자기의 손바닥위에 놓고 남북관계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겠다는 것이다.

한미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미국의 정책적 기준에 따라 조절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과 같은 치욕스러운 요구를 겪어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공헌했던 바를 스스로 부인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것은 향후 우리가 맺은 국제적인 협약을 미국이 **하고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정부로서는 번복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권의 극심한 침해이자 한국의 국제적 발언권이 신뢰를 잃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럴 바에는 한국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협상은 차라리 미국과 직접 벌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회창은 한러정상회담에서 괜히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지지해서 미국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다면서 외교적 실수라고 했다.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은 군비경쟁억제노력의 소산이라는 점을 내세워 우리가 지지할수 있는 국제조약이다. 자기 자신이 서명 당사자인 미국이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지지한 우리를 문제삼는 것은 국제법파괴행위이다. 이회창은 이점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전략적 모호성을 운운하며 시비 걸 일은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요격미사일제한조약 지지논란에 눌러 엔엠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버린 것을 문제시해야 한다.

국정에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제 일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대주의적 발상과 수구냉전적인 강경론에 사로잡혀 미국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보기에도 황당하다. 만일 그것이 부시정권의 지원을 받아 차기대권을 노리는 전략이라면 그야말로 매국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처사와 태도로 대권을 겨냥한다면 이회창이 미국의 귀여움은 받을지 모르나 민족의 원성과 역사의 관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이상 민족의 생존과 이익을 패권국가의 제단에 바치지 말고 아리랑곡조에 맞춰 분단의 고개를 함께 넘어가야 한다.

역사에 사대주의자 이회창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연북의 길에 통일이 있다

최현영 / 구국전선 제460호, 주체90(2001)년 11월 21일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는 없다.

20세기 중반기에 시작된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을 새 세기에도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더 없는 수치이며 비극이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나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삼천리강토위에 융성번영하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외세에 의해 초래된 민족분열의 비극과 고통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려면 해내외의 온 겨레가 연공연북의 기치밑에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오직 연북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연북이라 할때 그것은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사상과 이념, 제도를 달리하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해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쳐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결국 연북이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온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어떤 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 수 있듯이 조국통일도 역시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주체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이다. 해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뭉치면 그것이 바로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길이다.

여기에 또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거족적인 위업이다.

조국을 통일하는 데서 기본은 그 어떤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진정한 화합과 단결을 이룩하는데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한다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기본문제가 해결되게 되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이여의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대단결하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로 되는 것이다.

지금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겨레가 단합못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혈통을 달리하는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열되어 있다. 우리 민족은 수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한핏줄을 이어온 세상에 보기 드문 단일민족이다. 비록 오늘에 와서 불미스럽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지만 유구반만년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 공통성에 있어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우리 민족구성원들은 남에서 살건 북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한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이익과 공통된 민족적 심리와 감정으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는 결코 민족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 민족이 있고야 사상과 제도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연북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 수 있게 하는 애국애족적인 길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동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한 악명높은 ≪국보법≫이 그대로 존재해 있는가 하면 분열주의자들의 반북대결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고조되는 화해와 단합, 통일열기를 전면부정하는 것으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연북이 없이는 절대로 통일이 있을 수 없다.

현당국자들이 진실로 남북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악명높은 ≪국보법≫부터 전면철폐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하며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의 조국통일 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연공연북의 기치밑에 통일대행진운동을 더욱 가속화해 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친필비는 서있다

이 나라에 드리운 민족분열의 비운을 가셔주시려
그리도 노고에 찬 먼길을 걸어오신
어버이 수령님의 한평생이
저 글발에 빛나고 있다

갈라진 겨레의 피눈물에 젖은 이 강토를 안으시고
수령님 지새워오신
기나긴 세월의 낮과 밤이
오늘도 저 글발 위에 어리어 온다

준엄히 젖어오는 눈길로
이 땅, 이행성에 그 어디서나
온 겨레가 우러르고 또 우러르는 친필비

외세의 칼에 맞은 깊은 상처가 *** 아프게 가슴을 허비는 땅
민족의 그 비극을 영영 가셔줄
태양의 빛발을 안고
여기 판문점에 수령님의 친필비는 서있다

오- 불멸의 저 글발앞에
삼가 발걸음을 멈추고 숙연히 머리숙인
민족의 순결한 양심이여! 애국의 넋이여!
반세기가 넘도록 분열의 고통에 피흐르는 세월이여

뜨거운 격정의 눈물로 조용히 거룩한 저 글발을 **한다
어버이 수령님 생애 마지막 날에
통일의 대경륜을 펼치시며 남기신 그 친필
우리 장군님 화강석비에 새겨 조국과 민족앞에 높이 세우셨나니

반만년의 이 **
민족의 창창한 앞길에 태양은 빛난다.
그 햇빛 꺼질줄 모르는 하늘아래서
무궁토록 번영할 내 조국의 미래는 찬란하여라

오- 수령님의 친필비는 서있다
김 일 성
위대한 존함과 함께 영원할 하나의 조선, 하나의 민족
그 존엄 높은 모습으로

어버이 수령님 그토록 바라신 통일된 삼천리
주체의 강성대국을 이 땅위에 기어이 일떠세우실
장군님의 결심 장군님의 의지를 안고
위대한 친필비는 여기 강토의 한복판에 높이 서있다



주체 90, 11월 11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9일 조선인민군 제165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퇴역장교 박모씨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격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0일밤 서울 숭실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노동자와 학생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태일열사정신계승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가졌습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1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택시월급제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과 참여연대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준비위원회는 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쟁반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0일 교수노조출범을 앞두고 교육부가 각 대학 총, 학장들에게 탄압공문을 보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밤 11시 40분 서울시 서초구 모 종자회사에 농민 19명이 들어가 5층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상경한 농민들은 이 회사에서 판매한 배추종자가 불량인 바람에 피해를 보았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세계무역기구반대국민행동은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앞에서 소속회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세계무역기구체제가 국민경제황폐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일방적인 무역자유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일교포신문인 ≪민족시보≫ 11월 1일자가 ≪시대에 역행하는 수구세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최근 냉전시대의 복귀를 꿈꾸며 준동하고 있는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최근 한나라당의원들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친북세력이니 친북적인 이념이니 뭐니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은데 대해 지적하고 이는 통일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자들이 6.15공동선언이행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내밷은 헙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한나라당의원들이 무슨 이념을 부르짖으며 사회분위기를 극단적인 대결에로 몰아가는 한편 이북을 자극해 모처럼 진척되어 오던 남북화해협력분위기를 파탄시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6.15공동선언은 조국의 하나됨을 절실하게 바라는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면서 7천만 겨레는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반통일보수세력들이 마구잡이발언을 하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짓밟고 민족앞에 엄중한 죄악을 짓고 있다면서 민족화해를 원하지 않는 자들은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조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최권일단장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하에 벅찬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주체조국의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영도자님께서 계시어 부흥강국건설은 확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쿠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발표 12돌에 즈음해 10월 31일 쿠바주재 이북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부-항일혁명편 6권을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출판했습니다.

주체 90, 11월 12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난 10일 112호닭공장을 현지지도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조합원과 가족 등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1 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교원과 교대생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역설해 각계의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지난 9월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에 진출한 제대군인들에게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당신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영도자들이 축전을 보내온데 대해 그들에게 답전을 보내셨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1일 이북을 방문한 몽골평화친선단체연맹 단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친선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인사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지지월간에 즈음해 10월 25일 프랑스 조선친선협회 주최로 반뇨시에서 집회와 사진전,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11월 13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11월 12일 ≪오중흡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97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일 단병호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벌였습니다.
공안당국은 각계의 일치한 요구대로 단병호위원장에 대한 불법부당한 공판을 당장 중지하고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노동계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페루의 빌랴 마리아 델 뜨리운포시 명예시민증서와 금메달이 수여됐습니다.

2002년 태양절 기념 및 2.16경축 프랑스 준비위원회가 6일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청사에서 결성됐습니다.

주체 90, 11월 14일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구의 최모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베푸시는 문화복지시책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그분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자주민보탄압저지 및 구속언론인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검찰청앞에서 대회를 열고 구속된 자주민보언론인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소속 농민 1만3,000여명은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쌀값보장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원대학교 총학생회는 경기도 경찰청이 9일 총학생회 황**부회장을 연행한 것과 관련해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살아남아 오늘 또한명의 애국학생이 한총련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분격을 표시하면서 분열된 조국의 아들딸로 태어나 내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죄로 되는가고 반문했습니다.

성명은 황**부회장을 연행한 경기도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한 다음 청년학생들은 통일시대의 망령 보안법철폐투쟁을 최선두에서 전개해나갈 것이며 한총련이적규정을 철회하고 조국의 통일을 안아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주5일근무제에 관한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경영계가 최근 주5일근무제도입을 무산시키기 위해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주5일근무제를 쟁취하기 위해 협상을 전면중단하고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남북대결책동이 갈수록 심해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지난 8일 반공단체인 이른바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안보강연회라는데서 북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다 못해 이북에 대해 테러주의와 결연해야 한다느니 과거의 테러를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었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언은 이북에 테러혐의를 씌워 압살하려는 부시행정부의 돌격대로 나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 차기대통령감투를 써보려는데서 출발한 비열한 행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회창의 이러한 반민족적 망동에 대해 각계에서는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마귀 백번 울어도 까악소리밖에 못한다고 이회창이 떠드는 소리란 모두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소리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KAL사건이요, 아웅산사건이요 하는 것들은 모두 선행 독재자들이 정권위기수습을 위해 저지른 자작극이였다. 그런데도 이회창이란 자가 재향군인회라는 반공단체가 주최한 강연에서 그것을 북의 테러로 몰아붙이면서 사과를 운운한 것은 남북대결을 격화시켜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이북에 테러국가라는 딱지를 붙여 압살해보려는 전쟁광신자 부시에게 아부아첨해서 차기대통령감으로 인준받으려는 수작이다. 이회창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공격을 끝낸 다음에는 이북에 대한 공격을 가해줄 것을 바라면서 미국에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그의 측근들이 전하고 있다. 이회창은 자기가 대권을 차지하면 북침전쟁을 일으켜 승공통일을 이룩하겠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어 파멸시키려는 반민족적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회창은 매우 위험천만한 인물이다. 6.15공동선언대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인 이회창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민통선관할 군부대가 환경단체등의 민통선내 미군사격장 산림훼손현장확인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농민의 영농출입증을 강제회수해 농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천에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이남의 ≪한나라당 총재≫가 남북관계발전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812호를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독일정부가 이북에 인도주의협조물자로 제공하는 6,000톤의 냉동소고기 기증식이 13일 남포항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13일 인도네시아 인민대표회의 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이북을 방문한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이 주한미군이 한반도통일의 기본장애물이라며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혁명활동약사를 나이지라신문 ≪옵저버≫ 5일자가 게재했습니다.

주체 90, 11월 15일

민주노총소속 노조원 김기성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이북을 노동자들의 천국으로 찬양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비난했습니다.

1970년대에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분신한 노동운동가 전태일열사의 31주기 추도식이 13일 오전 11시 30분 그가 안장되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미연합대규모연안상륙훈련이 지난 12일 서부전선일대에서 감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보도된 것처럼 지난 12일 서부전선일대에서 이른바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한미연합대규모연안상륙훈련

이 감행됐는데 미3해병대 원정군사령관 등이 훈련에 참관했다고 합니다. 미해병대와 한국군해병대, ≪청룡≫부대, 해군6항공전단, 육군도하부대 등의 대병력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서부전선에서 최초로 실시된 한미연합연안상륙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반도작전지역의 특성체험을 통한 연합연안상륙작전수행능력향상과 장갑차와 상륙용고무보트를 이용한 상륙작전절차숙달, 연안장애물극복능력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그 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철두철미 북침을 가상한 전쟁연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침전쟁연습으로 인해서 한반도정세는 날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고 이는 내외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당국이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구실로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조치를 내리고 미군무력을 한국에 추가배치하는 한편 매일같이 벌이고 있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은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인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을 감행하면서 테러지원국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고 있는 한편 이북을 테러지원국명단에 계속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규모 연합상륙작전훈련을 감행한 것은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기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당국자들이 입으로는 남북간의 대화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북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전례없는 상륙작전훈련이라는 전쟁연습을 강행한 것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파탄시키고 힘으로 북을 압살해보려고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남북장관급회담을 남측이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것도 미국의 이같은 대북적대시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남북간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미국과 군부가 예견하지도 않은 대규모전쟁연습을 불시에 벌인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것입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지 않겠는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는데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반미반전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태광산업노조위원장 38살 김**씨와 부위원장 36살 윤**씨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파쇼경찰은 김씨 등이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광산업의 파업을 주도했다는 당치않은 구실밑에 이같은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은 제6차 회담이 결실없는 회담으로 된 것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11월 16일

부산시 **구에서 살고 있는 최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 시민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내년도 주한미군주둔비분담금인상요구 등을 철회할 것을 미국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소속 교사 1천여명이 단체협약체결과 사립학교법개정을 요구하며 14일부터 4일 동안 또다시 연가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단체들은 14일 한나라당에 교원정년연장추진에 반발해 전국 104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집회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쟁과 관련해 최근 한국정부에 연락장교단과 의료지원단의 파병을 공식요청해 왔다고 국방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철도노조와 한국전력노조 등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간산업민영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1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이 남남갈등을 악용해 통일전선전략이니 뭐니하며 이북이 제안한 6.15남북통일대토론회를 반대해 나선 데 대해 각계에서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 관한 상보가 발표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15일 인도네시아 인민대표회의 대표단이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오늘 세계사회계는 이남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새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을 준열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 브리즈 모한위원장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해 일본에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공포, 발효된 것을 규탄했습니다.

주체 90, 11월 17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피바다가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퇴직언론인 백모씨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각계에서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킨 당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담과 관련한 보도들을 들어보면 회담이 결렬된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 수석대표의 경거망동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방 실무자들이 합의하고 문안까지 다 정리해놓은 공동보도문을 전면부정하고 합의사항들을 일순간에 뒤집어버리고 돌아온 홍순영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당국이 이번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로 합의하고도 미국에서 있은 테러사건을 구실로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는 비상경계조치를 취한 것은 민족보다 외세를 우위에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외세와 공조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수 없다. 당국이 진정으로 6.15공동선언을 차질없이 실천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공조의 길로 나가야 한다.≫

이산가족인 김모씨는 통일부장관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키고 돌아온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측이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공모해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에 광분하면서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숱한 인명을 실은 비행기가 남북을 오가는 과정에 무슨 사건이 발생할지 누가 알겠는가. 당국의 말대로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계조치를 취했다면 이산가족상봉도 마땅히 안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북측이 금강산에서 상봉하자고 제안한 것은 정말 백번 옳다. 그런데도 남측이 장소문제 등을 가지고 시비질하다가 회담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돌아온 것은 이산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찢는 반민족적, 반인도주의적 처사가 아닐수 없다. 이번 회담결과를 놓고 우리 이산가족들은 누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가를 깨닫게 됐다. 또 미국이 역사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때마다 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란다면 미국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자주적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무산시킨 남측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다.≫

농협중앙회가 올해 쌀추가매입분량 400만섬을 벼 40킬로그램 한가마에 53,240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약사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해온 경희대 한약학과 학생 102명이 집단사퇴서와 퇴과신청서를 대학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잘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이산가족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이 전한데 따르면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실도 없이 결렬됐다는 보고를 받은 이회창은 잘됐다면서 자신은 당초에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회담, 북에 퍼주기 위한 남북회담은 바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산가족들은 분노를 표시하며 이회창은 용서할수 없는 민족반역자라고 규탄하면서 그를 당장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이산가족은 너무도 분격한 나머지 이회창은 쓸개빠진 자식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반이회창투쟁에 나설 것을 이산가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연장과 남북협력기금사용의 국회사전동의 그리고 건강보험재정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한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며 당론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투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이부영부총재와 김덕룡, 김원웅의원 등 소속의원 10명은 지난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소신과 양심에 따른 투표보장을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던 쟁점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됐다 하더라도 소속의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며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국회의원의 분위기가 당론에 우선될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당론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명한 토론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이회창의 독선적인 당론을 비난했습니다.

대구의 한 농장에서 기르는 사슴에서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인민대표회의 의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한 태국정부 무역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조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과 이북 청년학생들의 연환모임이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 13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북 대표단 단장이 연설했습니다.

그는 오늘 세계평화와 안전에 관한 논의에서 한반도문제는 언제나 중심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있지도 않은 북조선의 위협을 구실로 한반도주변에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이 집결되어 북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불안정을 낳은 근본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이북이 최근 수년간 역사에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적대세력들의 공세에 단독으로 맞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 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수호에 기여할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선군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영도자님의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사상에 의해 지난해 한반도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7천만 겨레의 통일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시강경정책과 부당한 간섭책동으로 해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은 오늘 커다란 장애에 부닥치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간섭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의 미사일계획은 순수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어느 나라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미대화재개문제에 언급하면서 이는 부시행정부가 낡은 냉전사고방식을 버리며 그들의 입장이 최소한 클린턴행정부가 임기의 마지막시에 취했던 입장수준에 도달할 때에야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경향과 군국주의 부활시도를 비난하고 일본이 과거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진정으로 평화의 길로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여사의 탄신 84돌에 즈음해 지난 8일 콩고 중앙TV방송이 특별방송을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 정당 지도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세상에 존엄을 떨치고 있는데 대해 한결같이 경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